

제2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활동 및 평가

제1장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제2장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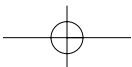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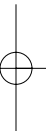
제3장 인권침해행위 조사 및 구제

제4장 차별행위 조사 및 구제

제5장 교육·홍보를 통한 인권의식 제고

제6장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제7장 기획사업 :
버림받은 어린이, 학대받는 노인



제 1 장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제1절 개요

정부의 정책·법령·제도 및 관행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반인권적 요소는 오랜 기간에 걸쳐 고착화되면서 인권침해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해 왔다. 그러므로 인권침해의 근원적 해소 및 예방을 위해서는 인권 관련 법령·제도·정책 및 관행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설립 초기부터 인권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법령을 제·개정하는 데 있어 면밀한 검토와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개선을 위한 노력(제19조)을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법령과 정책, 기타 제도 및 관행에 의해 야기되어 온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함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 단체와 협의(제20조) 등을 통해 관련 정책·법령·제도가 인권보호와 향상의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정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구치소, 교도소 등 구금시설, 다수인 보호시설 그리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인권 상황 실태조사(제19조)를 통해 더욱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체계적인 인권정책 기초 자료를 확보해 나감으로써 장기적으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주요 인권조약의 정부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국내 이행 방안 수립을 촉구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인권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

위원회는 <표 2-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위원회법 제19조에 의거,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 등 13건의 인권 관련 법령에 대해 의견표명을 하고, 부처협의 등을 통하여 2건의 인권 관련 법령·제도 개정때 위원회의 입장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표 2-1-1> 인권 관련 법령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

번호	날 짜	권고제목	권 고 내 용	해당부처	결 과
1	2002. 2. 20 (상임위원회)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	테러행위에 대한 개념 규정, 형벌규정, 절차규정 및 국가 기능 재편에 관한 규정들이 헌법 및 국제인권법 기준을 위반하고 있으며, 테러방지 예방 및 대책은 기 존의 법·제도로 충분히 가능	국 회	수 용
2	2002. 5. 8 (소위 7차)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 정책지원에관한법률시 행령개정안 개선 권고	해외여행 규정 삭제	통일부	미반영
3	2002. 5. 10 (소위 14차)	국립소록도병원운영규 칙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한센병 환자범위, 권리제한, 병원장 권한 집중방지	보건복지부	일부반영
4	2002. 5. 13 (소위 9차)	여의도 성모병원 진폐 환자 병동 공중보건의 배치협의	진폐 환자 전문 의료기관 지 원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개 선 협의	보건복지부 노동부	수 용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제 1 장

번호	날 짜	권고제목	권 고 내 용	해당부처	결 과
5	2002. 6. 10. (부처협의)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 칙개정안에 대한 의견 협의	사법경찰관의 최장 12시간 긴급감청부분 삭제	정보통신부	수 용
6	2002. 7. 20 (소위 14차)	강릉시 조례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복지시설 위탁 해지사유를 명확히 규정할 것	강릉시청	수 용
7	2002. 8. 13 (소위 15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자율통신제한 조치가 바람직	정보통신부	일부수용
8	2002. 8. 13 (소위 15차)	부랑인 시설 설치·운 영에 관한 개정안 의 견 제출	노숙자를 부랑인 개념에서 제외 시설장 재량으로 입소자의 퇴소여부를 결정하지 말 것	보건복지부	수 용
9	2002. 8. 27 (소위 16차)	사상전향제도 및 준법 서약제도에 대한 의견 표명	사상전향 거부행위가 인권신 장에 기여한 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음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수 용
10	2002. 9. 24 (소위 18차)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 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아동복지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포함	청소년 보호위원회	입법과정 진행중
11	2002. 9. 27 (부처협의)	반인도적범죄등의 처벌에관한특별법안 검토의견 제출	법안 편제의 수정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의 재고	법무부	입법과정 진행중
12	2002. 9. 25 (소위18차)	보험업법개정안 제165조에 대한 의견 제출	보험사기조사와 관련하여 관 계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한 조항 삭제 요청	재정경제부	수 용
13	2002. 10. 28 (소위19차)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 특별법 한시규정	조사기간의 한시규정 개정 또 는 폐지, 강제력 있는 조사권 부여	국 회	일부수용
14	2002. 11. 4 (소위20차)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 법률제정안에 관한 의 견 제출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규정 보완, 생명업무에 상업적 영리 추구 기관의 참여, 업무위탁 제한·축소 등	보건복지부	입법과정 진행중
15	2002. 11. 25 (소위21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권고	산업재해 판정시 남녀차별 문제 시정	노동부	수 용

※소위 :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1)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

2001년 11월 정부는 9·11 미국 테러사건을 기점으로 시작된 전 세계의 테러 대응책 마련 및 ‘안전 월드컵’의 일환으로 국가정보원이 발의하여 「테러방지법」을 제정하고자 시도하였다.

「테러방지법」 제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각종 국제규약 및 외국의 사례 등을 검토하는 동시에 2001년 11월 30일 국회의장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공청회를 여는 등 신중한 절차에 따라 테러방지법(안)을 심의하도록 권고하였다. 2001년 12월 7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제1차 청문회를 열어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대한변호사협회 및 시민단체와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였다. 아울러 한국헌법학회 및 국제인권법학회의 의견을 조회하고, 추후 국제사회의 동향 파악 등을 포함한 심도 있는 연구를 거듭한 끝에 2002년 2월 20일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후 위원장, 상임위원 등이 직접 국회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접촉해 법 제정의 부당성을 설득한 바 있다. 또한 월드컵이 무사히 마무리됨에 따라 이 법안에 대한 논란은 수면 이하로 가라앉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한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별도의 테러방지법이나 대책기구를 두지 않아도 기존의 법·제도, 국가기관의 체계로 테러범죄에 대한 예방, 처벌, 방지 대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정보원, 대검찰청(공안부 공안기획관), 법무부(출입국관리국), 건설교통부(항공국), 관세청(조사감시국), 해양경찰청(경비구난국), 경찰청(경찰특공대) 등에 테러대책 관련 부서를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법·제도적 측면에서도 형사법에 의한 테러 범죄 형사 처벌, 테러 자금 봉쇄 및 국제 협력을 위한 제도 등이 있다. 이처럼 현행법과 제도는 테러행위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배포에서부터 테러행위의 예방과 진압, 수사와 처벌을 위하여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 및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현재 중대한 테

러사태에 대비하여 군을 포함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경찰,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직장 등을 포괄한 통합적인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 특히 월드컵 대비 테러대책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등에 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 : 국가정보원장) 및 안전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안전 월드컵 수행을 위한 한시법 제정’ 논리도 근거가 빈약한 것이다.

둘째, 「테러방지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회, 대테러센터, 대테러대책협의회, 분야별 대테러대책회의 등의 설치 및 운영 과정에서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이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군대는 물론 일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까지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테러방지법안」에 명시되어 있는 테러의 개념, 테러단체의 범위(법안 제2조)가 애매하고 추상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점, 테러범죄미신고죄(법안 제21조) 및 허위신고죄(법안 제22조) 관련 규정은 판단기준이 불명확함에 따라 집행기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집행할 소지가 있으며, 테러 혐의가 있는 외국인 관련 규정(법안 제11조)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 소지 및 외교적 부담이 우려되는 부분이며, 군 병력 출동 관련 규정(법안 제14조)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넷째, 법안에 규정된 테러대책기구는 국가 조직체계를 재편함으로써 국가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고 국가정보원의 권력 남용 소지가 있으며, 아울러 대테러센터의 비공개 운영(법안 제7조)은 공개 행정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위원회에서는 이상에서 제기한 문제점이 있는 조항들을 빼면 테러방지법은 제정될 필요성을 상실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입법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2)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개선 권고

통일부는 2002년 4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취업보호 절차 등을 보완하

제 2 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활동 및 평가

여 법령 시행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북한이탈주민관련법률시행령개정안」(이하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에 통보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개정령안의 일부 신설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여 2002년 5월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또한 시행령 규정에 대하여 보완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개정령안 제42조제2항 “...신변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협의하여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외여행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조항은 법의 보호 대상자에게 해외여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첫째, 시행령안의 신설 규정이 모법 제22조(거주지보호) 취지에서 벗어나며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해외여행 제한의 사항이 추가되는 등 법형식상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원칙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해외여행 제한은 국민에 대한 해외여행 제한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 및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을 뿐이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을 달리 규정해야 할 특수성이 있다면 모법에서 제한의 근거, 절차와 방법, 권리 보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주체가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법률상 제한은 「여권법」이나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고,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협의할 수 있는 체계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들어 위원회는 시행령안 제42조제2항 후단의 신설 규정의 철회 또는 모법에 해외여행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행하더라도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법체계상 「여권법」이나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도록 권고하였다. 아울러 부수적인 의견으로 시행령 제10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에서 제3자나 대리인을 통한 권리 행사를 법률의 근거 없이 또는 추상적인 규정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 제17조 보호신청이 거부된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에 미흡한 점, 제21조 정착지원시설 입소시 인권보호

와 권리구제 절차의 미흡성과 제41조 실태조사규정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개정을 권고하였다. 통일부는 위원회의 이와 같은 권고에 따라 개정령안의 표현을 수정하여 확정하였으나 사실상 초기 안과 크게 다르지 않아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국립소록도병원운영규칙제정안」에 관한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는 2002년 4월 한센병 환자 등의 입·퇴원의 기준과 절차, 자치회의 활동, 일반인 출입통제 등과 관련한 보건복지부령인 「국립소록도병원운영등에관한규칙안」(이하 “규칙안”)을 제정하면서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였다. 위원회는 규칙안에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자체 검토를 통해 2002년 5월 개선을 권고하였다.

규칙안은 공공시설인 국립소록도병원에서 효과적인 치료와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환자들의 권리의무 제한을 예정하고 있지만 전염성이 거의 없는 한센병 환자들에 대해 권리제한을 가함으로써 인권침해가 우려되었다.

첫째, 형식적인 면에서 볼 때 자치회 운영 등에 있어 병원장의 승인 등,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이 규칙의 성질상 포함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규정들이 있었고, 둘째, 환자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도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권리제한을 가져오게 되며, 셋째, 입원 환자에 대해서도 면회, 입·퇴원 등과 관련하여 환자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아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었다. 넷째, 원장의 권한이 비대한 반면, 이를 견제할 장치와 절차가 없었다. 이러한 조항들로 인해 규칙안의 적용대상 환자에게 직접적인 인권 침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는 같은 질병을 가진 환자들과 병력자들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기존의 훈령이나 병원 내규로 환자의 권리를 제한하였던 것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의도는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 환자들의 거주이전 및 자치권, 병원장의 권한 집중 방지 등 검토된 문제점들

을 충분히 인식하여 제정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칙안을 수정하였으나 규칙의 적용 범위, 한센병 환자의 정의, 병원장의 권한과 관련한 조항 등에는 여전히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환자의 정의 규정에서 통원 치료중이거나 치료를 마치고 재활을 준비하는 한센병력자는 제외되어야 하며, 병원 운영이나 환자 치료와 관련 없는 병원장의 권한은 제한되어야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여 2002년 7월 다시 개선을 권고하였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입원 대상자에 여전히 한센병력자를 포함시키고 있으나 입원 결정, 전염병 환자 등에 대한 조치, 환자현황 보고 규정 등을 다시 대폭 수정하였으며 환자의 외출·외박, 자치회 운영, 퇴원절차 등 병원장의 권한과 관련한 규정들을 삭제하는 등 권고의견을 반영하여 규칙안을 2002년 10월 확정, 공포하였다(보건복지부령 제224호, 2002. 10. 24 공포).

(4) 여의도 성모병원 진폐환자 병동 공중보건의 배치 협의

2002년 4월, 여의도 성모병원이 의료인력 부족과 적자를 이유로 들어 산업의학과 진폐환자 병동을 폐쇄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병동에 전공의가 없게 되어 대체인력으로 공중보건의를 배치해 달라는 요청을 보건복지부에서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함으로써 치료를 받을 수 없게 된 환자가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였다. 위원회는 성모병원에 대한 의견청취 등 자체 조사를 실시하여 진폐환자 병동에 의료진 부족이 주된 문제이며 공중보건의 배치가 우선시급한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정책, 진폐병동 역할 등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공중보건의 배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대도시 대학병원에 공중보건의 배치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등 관련법의 취지에 반하며, 산업의학과 전공의 확보 차원에서 정책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위원회는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서울 소재 민간 병원에 공중보건의 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령상 그 배치의 불가피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정이 조건으로 요구되고 있었고, 특정 병원에 공중보건의 파견을 요청하는 것 또한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진폐환자 관련 주무 부처인 노동부의 「진폐환자보호종합대책」과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보건복지부의 공중보건의 제도, 진폐와 관련한 여의도 성모병원의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여 노동부가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의도 성모병원을 진폐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여 공중보건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법령 개정 후 공중보건의를 파견하기로 하였다. 관련 부처의 이러한 적극적 노력에 대해 위원회는 권고의견을 유보하기로 하고, 향후 주무 부처간 협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다시 권고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지었다.

노동부가 2002년 9월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점점 취약해지는 진폐 예방과 치료 분야에 시급한 의료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여의도 성모병원에는 공중보건의가 파견되어 있다.

(5)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개정령안」에 대한 협의

정보통신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2001.12.29)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구체화하고자 「통신비밀보호법시행규칙개정안」(이하 “규칙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이에 대해 규칙안 제2조의2 긴급통신제한조치의 협조절차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공식적 입장이 2002년 5월 보도되는 등 위원회에서 검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규칙안 제2조의2(긴급통신제한조치의 협조절차) 내용은 사법 경찰관이 집행하는 긴급감청에 협조한 통신사업자의 경우 12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신청했다는 소속 기관장의 확인서와 30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서를 받도록 하는

제 2 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활동 및 평가

것이였다. 정보통신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3항 긴급감청 규정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시행규칙에서 구체화하고자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와 관련한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12시간 이내에 검사의 승인을 건의)을 참조하여 검사의 승인 없는 감청이 장기간 행해질 가능성을 배제하는 취지였음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규칙안은 「통신비밀보호법」에 긴급감청의 경우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신청을 받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 경찰관이 최장 12시간 동안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정보통신부에 위원회법 제20조 통보의무 규정에 의거하여 규칙안에 대한 통보를 요청하고, 법제처에 규칙안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 또는 반려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2002년 6월 7일 규칙안 제2조의2를 삭제하고 통신사업자는 관할 지청 또는 지검의 해당 검사에게 긴급감청 착수시간 등이 포함된 감청 사실을 팩스로 통보하도록 「통신비밀보호업무처리지침」에 명시하여 검사가 사안별로 수사기관의 긴급감청 남용을 통제하도록 하는 공식적 의견을 위원회에 알려 왔다.

위원회는 정보통신부의 의견 내용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제처에 규칙안 심사보류 요청을 해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부에 「통신비밀보호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령 개정시 규칙안 제2조의2 삭제 의미를 유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인권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통신비밀보호법령 전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해 나갈 것이며, 정보통신부가 기타 소관 법령 중 인권을 침해하는 법령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자체적으로 개선 노력할 것을 요청하였다.

(6)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개선 권고

강릉시는 「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이하 ‘시설조례안’)과 「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하 “기금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와 관련하여 2002년 7월 위원회에 사전 협의를 요청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한 최초의 사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조례안을 검토한 후 시설조례안 일부의 인권침해 우려 조항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하였다.

시설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의거하여 강릉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기금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53조에 의거하여 강릉시 관내 거주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의 지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위원회는 각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령 및 관련 법령과 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조례 등과 비교해 검토를 하였다. 그 중 시설조례안 제8조제1항(계약의 해지)제4호 ‘기타 공익상 시장(市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위탁 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포괄적 내용으로 남용될 우려가 있으며 수탁자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시설 이용자에게까지 피해를 주게 되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이 조항을 명확하게 표현할 것을 권고하고, 이 조례의 이행에 있어 항상 장애인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강릉시는 이러한 권고를 수용하여 규정의 표현을 수정한 후 2002년 11월 조례를 확정하였다.

(7)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에 대한 개선 권고

2002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 단속)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는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이라는 불온통신의 개념을 전제로 하여 규제를 가하는 것으로서 개념의 모호성, 추상성, 포괄성으로 말미암아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위헌결정(99헌마480)을 내림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온라인 상의 불건전 유통확산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이하 “개정안”)을 마련하여 2002년 7월 27일 입법 예고하고, 위원회에 통보해 왔다. 위원회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 및 정보통신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 외국의 입법

제 2 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활동 및 평가

례와 관련 법령 및 국제규약 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정안 제53조에 대해 개선을 권고하였다.

개정안 제53조는 ‘불온통신’의 개념을 ‘불법통신’으로 한정하고, 정보통신망상의 불법행위를 다른 법에서 금지되고 있는 행위를 근거로 하여 구체적으로 나열하였다. 또한 정보통신부장관의 명령권에 의해 이용정지·제한 등의 조치를 당할 전기통신 이용자에 대하여 의견진술권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외국의 입법례 및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에서 볼 때 통신제한 조치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조치는 실제 전기통신이용자의 통신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인터넷 등의 통신수단이 정보 접근가능성의 무제한성으로 인하여 일정한 통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사적 규제가 가능함에도 일률적으로 행정 명령이라는 공적 규제에 의하여 통제하려는 것은 행정규제의 최소화 원칙에 반하며, 표현의 자유 및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개정안 제53조 규정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제1항제1호 ‘음란한 내용’, 제3호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표현, 제7호 ‘국가기밀’, 제3항제2호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법 집행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국가의 행정통제보다 정보통신업자가 자율적으로 규제하는 방향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개정안의 구체적인 규정 내용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변경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부는 권고의견을 일부 반영하였으나 아직 미흡한 측면이 있어 인권 침해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하겠다.

(8)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개정령안」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는 「부랑인복지시설설치·운영규칙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을 2002년 7월 위원회법 제20조에 근거, 통보해 왔다. 위원회는 개정령안이 부랑

인의 정의, 입·퇴소에 관한 규정 등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권에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정령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규칙의 한계, 개별조항에 있어 인권침해 우려 부분 등에 관하여 개선을 권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의거하여 부랑인 복지시설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 설치 및 종사인력에 관한 신고기준을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을 개정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위원회에서는 개정령안은 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규칙임에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자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개별 조항에 대한 검토 결과 첫째, 개정령안 제2조제1호 부랑인과 노숙자의 분명한 개념정리 없이 부랑인에 견주어 상대적으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노숙자를 부랑인으로 보아 부랑인 시설에 수용하는 것은 노숙자의 특성을 무시한 처우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었다. 둘째, 개정령안 제9조제2항, 제10조 퇴소 심사 대상 및 당연 퇴소 대상에 대한 판단자와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입소자는 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시설의 장의 일방적 판단에 의해 장기 수용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부랑인 시설에 대한 행정기관의 효과적인 지원과 감독의 조화 노력을 촉구하는 동시에 개정령안 제2조제1호 부랑인에 포함되는 노숙자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할 것과 제9조제2항 및 제10조에서 퇴소 심사 대상자에 대한 객관적인 법적 판단근거를 마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02년 8월, 권고 의견을 전부 반영하여 개정령안을 수정하였음을 우리 위원회에 통보해 왔다.

(9) 사상전향제도 및 준법서약제에 대한 의견 표명

2002년 6월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접수 사건(사건명:대전 교도소내 전향공작전담반의 전향강요 과정에서 폭행으로 인한 사망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건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사상전향제도의 반

인권적 제도 여부, 전향거부 행위의 성격, 전향제도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준법서약제도와와의 관련성 및 준법서약제도의 반인권성 여부 등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사상전향제도의 연혁, 헌법 및 국제규약 등의 관점에서 인권침해성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 후 의견을 회신하였다.

사상전향제도는 1936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제정으로 마련된 제도로, 해방 이후에도 1956년 「가석방심사규정」 등을 통해 지속되었다. 이 제도는 형식과 내용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 제도로 1998년 10월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사상범의 재범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준법서약서 제도를 도입하였다. 준법서약 여부에 대해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국가권력이 가석방을 조건으로 개인의 내심의 의사에 대한 표현을 사실상 강요하는 점에서 사상전향제도와 유사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비전향 사상범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제도 역시 앞서의 사상전향제도가 가지는 반인권성을 그대로 내포하여 헌법 제19조에서 보장된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이며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제18조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는 사상전향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국가가 강요하는 전향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인권신장에 기여한 행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표명하였다.

(10)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처벌조항을 보완하고 성범죄 대상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 당시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고 2002년 8월 위원회에 의견 요청을 해 왔다. 위원회는 개정안 내용 중 피해 청소년의 보호 및 청소년 대상 기관 취업·운영 등과 관련된 규정의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개정안의 전반적인 취지와 구체적 개정 조항의 내용에 대한 이견은 없으나 보완적인 권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성보호 범위의 확대(제2조), 청소년 성보호에 대해 기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회의 의무 추가(제4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이외에 청소년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한 성교행위 등에 대한 처벌(제5조), 청소년 대상 강간, 강제추행에 대해 친고죄 적용 배제(제10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 제한(제21조) 등이었다. 위원회는 개정안 중 제5조 ‘청소년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하여’의 추상성과 제10조 친고죄 조항의 삭제로 인한 피해 청소년의 인권 보호 강화 여부, 제21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등이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과 공청회(2002.9, 청소년보호위원회) 참여 등을 통해 종합적인 검토를 한 결과 인권침해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개정안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위원회는 청소년보호와 재범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개정안 제21조제1항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 제한에 있어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보완을 요청하였다.

(11) 「보험업법개정안」 제165조에 대한 권고

위원회는 2002년 7월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보험업법개정안」(이하 “개정안”) 중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사기 조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개인정보 보호에관한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165조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 위원회법 제19조제1호에 의거해 의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현행 「보험업법」 제182조는 관계자에 대한 조사 권한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부여, 진술서의 제출, 장부·서류 등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 제162조는 조사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부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직접 조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조사할 수 있게 하면서 장부·서류 등의 제출요구, 출석 요구권을 갖게 하는 등 그 권한을 더욱 강화, 준사법적 권한까지 갖게 하였다. 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이 조항에 의거하여 이미

제 2 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활동 및 평가

효과적 조사권을 보유하게 되는데, 다시 제165조에 금융감독위원회에게 광범위한 조사권을 주어 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제165조가 별다른 단서 없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목적 달성을 통한 이익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등이 침해당할 소지가 더 크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위원회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유와 사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인데 이를 개별법인 개정안에서 다룸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일반 원칙이 유명무실화될 소지가 있어 적절하지 않으므로, 신설되는 제165조 규정의 삭제를 권고하였다.

이러한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관련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002년 11월 5일 국회에 상정, 계류중이다.

(12) 「반인도적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별법제정안」 검토 의견 제출

1998년 로마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설립에관한로마규정」(이하 “로마규정”)에 대해 위원회는 관련 부처에 가입을 촉구하는 권고를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무부는 향후 예상되는 로마규정 비준에 따른 국내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 9월 「반인도적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별법안」(이하 “이행법안”)을 작성하고 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였다. 위원회는 이행법안에 대하여 대상 범죄 등 주요사항과 특성 등에 대해 로마규정의 취지, 규정내용 및 타국 법체계 등과 비교 검토를 통해 일부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행법안은 첫째, 편장철의 체계에서 볼 때, 로마규정의 3대 범죄에는 시효가 배제되는 점과 ‘사범방해죄’는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ICC) 및 다른 당사국과의 협력관계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점 등에서 이 범죄는 국제형사재판소 관련 절차 및 특례에서 규정(제3편)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보았다. 둘째, 범죄인 인도 및 형사사법공조 규정에서 ‘절대적 인도거절사유’, ‘절대적 공조거절사유’는 「범죄인인도법」이

나 「형사사법공조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서 표제를 차용한 것으로 오해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인도범죄에 관한 사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수사하고 있거나 공소제기되어 있는 경우를 절대적 인도거절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로마규정의 3대 중대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 좀더 많은 이해관계를 갖는 국가에서 인도요청을 할 경우 호의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국제적 사법 정의에 부합할 수 있다고 판단해 그러한 검토의견을 법무부에 제시하였다. 법무부는 이행법안에 대하여 위원회 이외에도 관련 부처의 의견들을 취합하여 자체 논의가 진행중이다.

〈표 2-1-2〉 반인도적범죄등의처벌에관한특별법안 주요 골자

제1편 통칙		법의 목적, 법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 규정	
제2편 죄와 형	제1장 반인도범죄등	제1절 총칙	적용범위, 형사책임조각사유, 상급자의 형사책임, 시효, 면소판결
		제2절 각칙	집단살해죄, 인도에반한죄, 전쟁범죄, 미수범 처벌
	제2장 사법방해죄	국제형사재판소 수사·재판 절차를 방해하는 행위 처벌	
제3편 국제 형사 재판소 관련 절차 및 특례	제1장 일반조항	국내 수사 사실 통보, 국가안보정보·제3국(기구)제공정보의 보호, 국제형사재판소와의 협의, 비밀유지, 공적 지위에 따른 면책불가	
	제2장 범죄인 인도	ICC 청구에 따라 소추, 재판, 형 집행을 위해 ICC에 범죄인 인도	
	제3장 형사사법공조	ICC 요청에 따라 ICC의 수사, 재판, 형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 제공	
	제4장 형의 집행	ICC에 신청하여 대한민국에서 ICC 범죄자 징역형 집행	
제4편 부칙		공포일 시행,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준용, 범죄구성요건	

(13)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개정 권고

시민·인권단체를 비롯하여 학계, 정치계 등에서 토론회, 입법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과 조사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고, 2002년 10월 17일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의 의문사 피해자인 허영춘(군 의문사 허원근 일병의 아버지)씨가 우리 위원회에 국회를 상대로 법 개정에 대한 권고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접수된 85건의 조사대상 사건 중 30건에 대하여 조사 기일에 쫓겨 실제적 진실 규명을 못하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과거 공권력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 및 그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기간을 2002년 9월 16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3조는 의문사 사건에 대하여 진실이 규명될 때까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그 동안 소환 대상 참고인들 중 상당수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관계기관들의 비협조로 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강제력이 있는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02년 10월 28일 국회의장·민주당 및 한나라당에 법 개정을 촉구하는 권고를 하였다. 이후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은 2002년 12월 5일 개정되어 조사기간 연장이라는 결실을 보게 되었다.

(14)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정안」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는 2002년 9월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고, 생명과학기술의 적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이하 “법률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였다. 이

에 따라 위원회는 관련 부처, 시민단체, 여성계 등 각계의 의견과 학자 및 전문가의 자문 등을 종합 검토하여 법률제정안에 대해 향후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을 권고하였다.

법률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의견은 첫째, 인간개체복제 금지 및 배아에 대한 보호가 핵심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난자나 자궁의 제공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 등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충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둘째, 생명 관련 업무는 국가기관이

〈표 2-1-3〉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정안 주요골자

구 성	항 목	내 용
제1장	총칙	목적, 정의, 국가의 책무, 국민의 자기결정권
제2장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과 운영, 준수사항
제3장	인간복제 등	인간복제의 금지, 이종간 착상 금지 등
제4장	인간배아의 생산과 이용	배아의 생산·이용·제공·관리, 배아생산 의료기관, 배아연구기관, 배아연구계획서, 동의 및 철회, 준수사항
제5장	유전자 검사	유전자 검사의 제한·동의·실시, 검사기관의 신고 및 정도관리, 검체의 양도·폐기, 기록의 관리, 준수사항
제6장	인간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	유전정보 등에 의한 차별금지, 유전자은행의 허가, 인간유전정보 등의 보호, 연구계획서 승인
제7장	유전자 치료	유전자 치료의 범위, 임상연구 실시, 유전자 치료의 시술
제8장	감독	보고·조사, 폐기명령, 기수명령,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청문, 과징금, 수수료
제9장	보칙	국고보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배아 및 유전자 관련 업무의 위임, 비밀누설의 금지
제10장	벌칙	벌칙, 과태료
부 칙		경과조치, 일몰규정 등

제 2 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활동 및 평가

주로 담당하고 상업적 기관의 참여나 위탁을 최소한으로 하여 생명 관련 업무에 대한 상업성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울러, 생명윤리 안전에 대한 대국민 홍보,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의무 등을 시행령과 부령 등에 세부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시하였다.

개별 조항에 대한 위원회의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자료열람, 수집, 복사 등)를 최대한 보장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시행내용에 대해 본인이나 대리인의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도록 하고,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위원 구성에 있어 보완적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인간배아의 생산·이용에 있어 향후 기술발전으로 인한 침해를 방지하는 규정과 여성의 난자 등의 제공에 있어 불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한 규정 신설이 필요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업무 관련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기관위원회 혹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료 등의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한다는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셋째, 유전자 검사, 유전정보 등의 보호 및 이용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 침해방지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며, 상업적 유전자 검사기관을 인정하는 내용 등과 관련하여 유전자 검사의 상업화 가능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유전정보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다른 의료기관에 유전정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한 보호규정이 필요하다. 끝으로 법률제정안에서 사용되는 ‘수입된 배아’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며, 그 허용 여부, 비밀누설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위원회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2002년 11월 4일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권고하였으며 이에 보건복지부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입법을 추진중에 있다.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 권고

2002년 1월 3일과 3월 20일 광모씨(남·39)는 2000년 6월 택시운전 도중

승객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뒤, 2001년 3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았으나 동일한 정도의 흉터가 남은 여성의 경우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남녀차별이라며 노동부장관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했다.

우리 위원회는 진정한 및 피진정인(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조사, 관련법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 대한 검토, 의료 및 산재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진행한 뒤, 2002년 9월 9일 각하를 의결했다. 이는 2001년 6월 진정한 곽씨가 노동부 산재심사위원회에 신청한 재심이 기각되었고, 2002년 7월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가 각하되었기 때문인데, 위원회법 제32조제1항제5호는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가 종료됐을 경우’ 진정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곽씨의 진정을 각하하면서,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 사건을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에 상정, 논의 끝에 노동부에 동법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게 되었다.

검토 결과, 동법시행령 제31조의 ‘신체장해등급표’는 동일한 외모의 흉터에 대해 남녀의 등급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를 제7급, ‘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를 제12급으로 명시한 반면, 남성은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를 제12급, ‘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를 제14급으로 판정하고 있다. 산재 및 의료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남녀의 등급을 달리 규정한 것은 의학적 타당성이 없고, 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의 사회통념을 현대사회에 반영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는 상처는 남녀 모두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는 문제라는 점 등을 지적한 뒤, 장해등급과 보상금 지급액 등은 “개인의 정신적 심리적 고통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불이익도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는 얼굴에 흉터가 남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등급을 높게 책정해 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 동법시행령 제31조가 남녀를 차별하는 평등권 침해(위원회법 제30조)라고 보고, 노동부장관에게 관련 조항의 개정을 권고했다.

제 2 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활동 및 평가

노동부는 우리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고 2003년 1월 5일 위의 규정을 개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40여 년 동안 남아 있던 남녀차별적인 조항이 사라지게 되었다.

(16) 기타 법제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

위원회는 개별 진정 또는 자체 조사를 통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법령에 대하여 조사·연구 및 의견 수렴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수용자의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의 혜택을 요구하는 진정 사안과 관련하여, 보험급여 정지의 차별여부에 대한 자체 검토를 통해 수용자의 경우 당연한 국가의 보호자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보험급여정지는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군인사법시행규칙개정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개정안」, 외국인 간이귀화제도 등과 관련하여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또한 공소시효배제 입법 관련 토론회,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수사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내부적으로 「경제적·사회적및문화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유럽인권협약상 체포·구속 등의 기준에 비추어 국내 법제를 검토하였다.

2. 인권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개선 권고

위원회는 <표 2-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위원회법 제19조에 의거, 「외국인력제도개선방안」 등 6건의 정책 권고를 통해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인권을 중요한 가치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1) 월드컵대회 관련 정부정책 중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표명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제20조). 위원회는 2002년 5월 27일 월드컵대회 기간중 집회와 시위의 자

유 등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의 특별한 주의와 지침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는 정부가 월드컵대회 개막을 즈음해 치안관계장관회의, 사회관계장관회의, 12개부·청 및 10개 월드컵대회 개최도시 관계관 회의를 통해 ‘최근 시위 양상에 대한 대책’, ‘월드컵대비 노사안정추진대책’, ‘월드컵·아시안 게임 대비 정부 특별안전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들 내용이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표 2-1-4〉 인권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권고

번호	날 짜	권고제목	권 고 내 용	해당부처	결 과
1	2002.5.28 (소위9차)	월드컵대회 관련 정부정책 중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표명	대회기간중 집회·시위자유보 호, 노동기본권 행사보장, 불법체류단속의 자제 등	국무총리실 법무부 노동부 경찰청	미수용
2	2002.7.23 (소위14차)	월드컵 기간중 집회· 시위자유에 침해 유감 표명	평상시는 물론 국제행사시 국 민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	경찰청	미수용
3	2002.7.30 (소위11차)	운전면허 수시적성 검사에 대한 정책권고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 률을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개정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결격 사유 재검토	행자부 경찰청 감사원	수 용
4	2002.8.13 (소위15차)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재검토 권고	산업연수생제도 단계적 폐지 고용허가제 도입 등	국무총리실	미수용
5	2002.9.9 (소위17차)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권고	체벌금지 및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를 위해 초·중등교 육법 및 동시행령 개정	교육인적 자원부	미수용
6	2002.10.28 (소위19차)	초·중·고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내용 직권수정 권고	인권의식 신장을 제한하는 조 치 수정, 차별적 인식조장 내 용 수정	교육인적 자원부	수 용

※ 소위 :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제 2 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활동 및 평가

정부의 ‘공권력 확립방안 및 대회 관련시설 특별치안구역 설정운용’과 관련하여 월드컵대회를 명분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축소되어서는 안 되며, 특별치안구역 운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와 지침이 필요하고, 중복 집회에 대한 무조건적인 금지통고 관행 개선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불심검문시 「경찰관집무집행법」 제3조에 규정된 준수사항 이행을 위한 지침시달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행정력을 총동원한 노사 평화 선언시 우려되는 노동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 시달,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과도한 단속의 자제와 인권보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리고 위원회는 월드컵대회 기간중 집회·시위 현장에서 이러한 인권보호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권위원 등으로 ‘인권현장확인반’을 구성하여 5차례에 걸쳐 활동을 벌였다. 인권현장확인반 활동은 집회 주관 단체 및 경찰 양측으로부터 과잉진압, 폭력시위를 상호 자제하게 함으로써 그 동안 집회 시위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던 인권침해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 월드컵대회 기간중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유감 표명

2002년 7월 23일 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월드컵대회 기간(5.31~6.30) 중 집회·시위의 자유가 현저히 침해된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평상시는 물론 부산아시안게임(9.29~10.14)을 비롯한 대규모 국제행사시에 헌법에 명시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경찰청이 7월 10일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1년 같은 기간(5.31~6.30)에는 총집회 신고건수 7607건 중 108건을 금지 통고하였으나, 2002년에는 총집회 신고건수 1만 599건 중 391건을 금지통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지통고건수는 1년 전과 비교할 때 362% 증가했으며, 총 신고 대비 금지비율은 1.4%(2001년)에서 3.7%(2002년)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집회 주최자의 시위 전력 때문에 불법폭력시위가 명백하게 예상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금지통고한 경우가 2001년 같은 기간에는 1건인데 반해, 2002년에는 150건으로 무려 150배가 증가하였다.

이것은 헌법 제21조에 “집회의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경찰청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집회 주최자에 따라 선별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기준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현재 집회의 금지사유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협’이라고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좀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침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또한 이 자료에 따르면 중복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금지한 집회는 16건이었으나 월드컵대회 기간중에는 113건으로 7배 이상 늘어났는데, 목적이 상반되는 동시집회라도 당사자들에게 사전에 통보하여 상호간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탄력 있게 운용함으로써, 중복신고 집회를 무조건 금지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3) 「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에 대한 정책 권고

감사원은 경찰청에 대한 감사 후 경찰청이 도로교통법에 의거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실시하던 수시적성검사가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의 진료기록을 건네받아 수시적성검사를 일부 실시하였고 또 계속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었다.

위원회는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의 병원 진료기록, 특히 사회적 편견이 강한 정신과 진료기록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주고받음으로써 헌법과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법 등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위원회법 제25조에 의거, 이 사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2001년 9월 감사원은 ‘감사결과처분요구와 권고·통보사항 송부’를 통해 첫째, “치매 등 정신질환자 2만 5510명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자료를 통보받아 수시적성검사대상자 지정 여부를 정하고”

제 2 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활동 및 평가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2조의5 개인정보통보 대상기관에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하였다.

경찰청은 감사원의 권고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2항에 근거하여 병원이 공단에 진료비 청구를 위해 제출한 개인 진료정보 중 알츠하이머(치매 포함) 등 정신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 받은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다. 이후 경찰청은 이 자료를 근거로 1종 면허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이미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는 자를 제외한 1만 2800여 명에게 수시적성검사 통보를 송부했고 이중 3000여 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상태였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2002년 7월 22일 경찰청과 공단이 근거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0조제2항제2호는 개인정보 보유기관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위 기관 스스로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처리 정보를 보유 목적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음을 지적하고, 설사 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상당한 이유’를 충족시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2002년 7월 30일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첫째, 경찰청은 수시적성검사 실시를 중지하고 「도로교통법」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개정할 것. 둘째, 행정자치부는 개인의 내밀한 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개인정보를 둘러싼 공공기관 혹은 정보 주체와 정부기관 간에 발생 가능한 문제들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셋째, 감사원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공무원들에 대하여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이다.

경찰청은 2002년 8월 31일 위원회의 정책개선 권고를 받아들여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제공받은 개인정보에 근거한 수시적성검사의 실시를 중단하고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재검토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개정하기로 하였음”을 통보해 왔다. 행정자치부도 2002년 8월 8일 위원회가 권고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운영상의 개선점을 적극 반영

하여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4)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재검토 권고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세계인권선언 제2조).

2002년 3월 현재 한국에는 약 33만명의 외국인노동자가 일하고 있는데 이들은 우리나라 경제의 부족한 일손을 메워주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표 2-1-5>와 같이 그들의 78.9%는 불법체류자 또는 미등록 노동자이고 8.1%가 산업연수생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을 가진 사람은 9.2% 정도에 불과하다. 외국인력정책이 겉으로는 산업연수제도·연수취업제도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미등록 노동자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운영은 외국인노동자의 선발과 입국을 둘러싼 송출 비리의 속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수의 급격한 증가, 장시간 노동 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양산하는 등 수 많은 문제점을 낳았다.

<표 2-1-5> 외국인력 현황(2002.3월 현재)

(단위 : 명, %)

전 체	합법 체류자					불 법 체류자
	소 계	합법 근로자		산업연수생	해외투자기업연수생	
		연수취업자	전문기술인력			
336,800	70,952 (21.1)	10,394 (3.1)	20,564 (6.1)	27,158 (8.1)	12,836 (3.8)	265,848 (78.9)

※ 자료 : 국무조정실, 2002

그래서 국내에서는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등 각계에서 토론회, 입법 공청회 등을 통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장시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

제 2 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활동 및 평가

을 경주해 왔다. 또한 유엔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 위원회 등 국제기구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할 것을 권고받았으며, 국제 인권회의가 열릴 때 마다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수차례에 걸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2002년 7월 15일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이하 “개선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이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2002년 3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불법체류자 신고를 받은 결과 파악된 불법취업자 수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 규모이므로 그 수만큼의 산업연수생과 외국 국적 동포에게 취업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되, 개선안 시행 이후 총리실 주관으로 정부합동 단속을 수시로 실시, 적발된 불법취업자와 송출업체·송출국가 및 고용주에 대해 법에 따라 엄히 제재하는 것 등이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2002년 8월 13일, 이 개선안이 외국인노동자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는 데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산업연수생제도의 단계적 폐지, 차별 논란이 없도록 취업관리제 보완, 불법체류자의 단계적 양성화 조치 등이 포함되도록 개선안을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즉 산업연수생제도는 국제사회에 한국이 인권 탄압 국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생성시키는 등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정부 스스로 인정한 바 있으므로 고용허가제 등으로 외국인력을 정당하게 고용하고 보호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연수생제도를 최소한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 국적 동포에게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으로 취업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것이나 국제규약과 헌법의 차별금지 조항에 배치하여 민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비난의 소지가 있으므로 편법이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외국인력을 차별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는 전원 출국조치하고 단속을 강화해 불법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불법체류자를 일시에 강제 출국 조치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잉 단속, 검문검색 등으로 인한 외국인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인권침해를 감안한다면 사면조치 등을 통하여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출국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러한 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정부는 불법체류자 출국조치에 대하여 현실감 있는 보완대책 마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 이외에는 위원회 권고안 수용을 사실상 거부한다는 답변을 보내 왔다. 정부는 2002년 11월 「외국인력제도 보완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후 위원회는 국내 거주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실태 조사를 근거로 2003년 2월 10일 현행 산업연수제 폐지 및 고용허가제 도입을 재 권고함과 아울러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보장 대책 마련,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의 통보의무 규정의 개정,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 기초자료의 번역본 개발 등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앞으로 위원회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광범위한 인권 실태조사 등을 토대로 외국인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신장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5) 「학교생활규정안」에 대한 권고

2002년 6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생활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유엔의 아동권리협약 등을 기준으로 검토한 뒤 2002년 9월 9일 위원회법 제25조에 의거, 학교생활규정은 예시안이기는 하나 실제 학교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관련법보다 더 크고, 이 예시안이 학생 인권의 악화 또는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새로운 「학교생활규정안」 또는 그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것과 차별 허용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차별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위원회는 차별이 학

제 2 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활동 및 평가

생들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처벌적 태도보다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공동체가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밝혔다. 또한 체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과 동법시행령 관련 조항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개정해 체벌금지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한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와 관련해 “학생도 학교운영의 책임 있는 한 주체이므로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도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폭력예방 의무를 부과하고, 폭력예방 교육과정을 두어 인권의 보장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학교내에 ‘인권상담기구’를 설치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현장실습 중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진다’고 규정한 실업고 예시안에 대해서도 “물적 손해에 대한 학생의 책임규정을 강조하기 이전에 학교 당국에게 철저한 정보수집과 학생의 안전보장에 대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년 11월 19일 학교 내 체벌금지 등 우리 위원회 권고안에 대해 사실상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아래와 같이 통보해 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인권 문제와 관련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만 체벌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7항의 개정 권고에 대하여 “교직단체, 관련 시민단체, 시·도 교육청 및 학교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므로 좀더 신중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제31조 개정 권고와 관련하여 “학생들은 미성년자이며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자임을 들어 학교운영에 참가하는 문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6) 초·중·고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 내용 직권수정 권고

위원회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상에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이 주학습 교재로 사용하는 교과서의 인권과 관련되는

〈표 2-1-6〉 직권수정 권고 내용 요약

학교급	국/검정	교과목	인권침해 교과내용	분석내용	조치사항
초등	국정	전과목	사회(6-2) 누려야 할 권리 지켜야 할 의무	표현의 자유	수정
			도덕(6) 함께 지키자-법을 존중한 소크라테스	근대 법정신에 위배	예화 대체
	검정	없음			
중학	국정	국어, 도덕, 국사	도덕(2) 시민윤리의 기본정신 - 규범을 지키는 정신	기본권 및 재산권	수정
			도덕(1) 학교생활과 예절 - 선생님의 은혜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양심의 자유	예화 대체
	검정	사회, 수학, 기술·가정, 음악, 미술, 체육, 영어, 과학	과학(1,2) 자료사진들의 물품 상표명	소비자 권리	삭제
			기술가정(1) 나와 가족관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수정
			기술가정(2) 청소년의 일과 시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수정
	국정	국어, 도덕, 국사	해당사항 없음		
고등	검정	사회, 수학, 기술·가정, 음악, 미술, 체육, 영어, 과학	사회(1) 국내총생산의 한계 : “자기 집 가정부와 결혼하면 국내 총생산은 줄어든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예화 대체
			사회(1) 우리나라 정치적 과제 - 보호받아야 할 장애자 권익	차별받지 않을 권리	수정
			체육(1) 올바른 성의식 - 성적 성숙	차별받지 않을 권리	수정
			미술(1) 디자인과 상징 - 살색	차별받지 않을 권리	수정
			영어(1) : The Roman Times	생명존중 및 노예제 금지	대체 혹은 수정

제 2 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활동 및 평가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학년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개년(초등6년, 중학3년, 고등1년)이며, 교과는 초등학교 13개 교과(바른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미술, 음악, 체육, 실과, 영어), 중·고등학교 11개 교과(국어, 도덕, 사회, 국사, 수학, 과학, 기술·가정, 미술, 음악, 체육, 영어)이다.

분석 기준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및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헌법의 기본권 조항 제10조 내지 제37조의 내용을 기초로 하였다. 2002년 10월 29일 위원회는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인권존중 의식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는 교과서의 본문, 예화 및 삽화 등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직권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개인의 권리보다는 국가나 집단의 이익과 공공질서를 강조하여, 권리 간에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 그 해결방안을 질서존중 중심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 스스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인권의식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사회과 및 6학년 도덕과,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 도덕과의 내용에 일부 드러나 있어 적절하게 수정하여야 할 것을 권고하였다.

둘째, 모든 사람은 장애, 성, 인종, 출생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1, 2학년 기술·가정, 고등학교 1학년 사회·도덕·체육·미술 등의 교과서의 일부에서 학생들에게 차별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중학교 1학년 기술·가정 교과서의 경우 가족을 ‘결혼한 부부와 혈연관계의 자녀’라는 제한된 개념규정을 근거로 서술함으로써 동거부부, 재혼가족, 입양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수 있어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하였다. 중학교 2학년 기술·가정 교과서의 경우는 가사노동 시간을 ‘주부가 가정에서 일하는 시간’으로 규정하고, 취사·세탁·청소·자녀 돌보기·가족 시중·장보기를 가사노동의 예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가정생활의 유지와 노동력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노동’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고

등학교 사회과 1학년 교과서에는 장애인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상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는 장애인이 비정상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함으로써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수정보완을 권고하였다. 더불어 고등학교 체육과 교과서에는 남성 생식기는 기능 중심의 설명을 한 반면, 여성 생식기에 대해서는 기능에 대한 언급 없이 성행위와 관련된 민감도를 밝히고 있어 이를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셋째,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는 로마시대 노예제나 맹수에 의한 죄수의 공개 처형을 흥미로운 오락거리로 소개하고 이에 대한 광고문을 만들어 보기를 학습 활동으로 제시하고 있어 생명에 대한 경시 및 잔혹한 취급을 받지 않을 권리 및 노예상태에 있지 않을 권리 등에 위배되는 의식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넷째, 중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에는 선생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한 예화로 학급의 도난 사건을 해결하는 선생님이 반 전체 학생을 절도 행위의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간주하고 자백을 강요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물리적 폭력이 동원되지 않았어도 선생님의 이러한 행위는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미담으로 제시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수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는 모든 사항을 수용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국정교과서의 경우는 2003년도 1학기 교과서부터 수정하여 배포하도록 하였으며, 출판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검정교과서의 경우는 2003년도 1학기부터 2004년도 1학기까지 인쇄상태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수정하여 배포하도록 조치하였다.

앞으로 위원회는 학교 정규 교육과정 체계에 인권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과서 분석 내용을 기초로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교과에 인권교육이 통합되어 실행될 수 있도록 인권교육 과정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제 2 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활동 및 평가

3.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권고

(1)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1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우리나라가 1978년 12월 5일 가입한 「모든형태의인종차별철폐에관한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이 1979년 1월 4일 발효됨으로써 이 협약 규정(제9 조제1항)에 의거하여 협약 발효 1년 후인 1980년부터 2년마다 정부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1년 11월 위원회가 설립됨에 따라 위원회는 2002년 1월 외교통상부의 제11차 정부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제9차, 제10차 정부 보고서에 대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제안 및 권고사항을 참고하였다.

〈표 2-1-7〉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권고

날 짜	권고제목	권 고 내 용	해당부처	결 과
2002.2.1 (소위 3차)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1차 정부 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제9,10차 보고서의 권고사항 중 미반영 사항과 구체적 실행계획이 아닌 선언적인 규정 등에 대해 보강	외교통상부	-
2002.2.26 (소위 5차)	고문방지협약 제2차 정부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국내법과 현행제도의 검토 부진, 국제조약 이행사항 및 이행을 위한 제반조치 누락으로 보완	외교통상부	법무부 검토중
2002.6.4 (소위 9차)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가입 권고	국제형사재판소규정 조속한 비준	법무부 외교통상부	수 용
2002.7.20 (소위 14차)	고문방지협약선택의 정서안 표결관련 의견 제출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안에 대한 ECOSOC 표결시 찬성	외교통상부	수 용

※ 소위 : 정책및대외협력소위원회

위원회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과 자체적인 검토 등을 종합하여 첫째, 협약 규정에 따른 적절한 정책 수립·집행 여부 및 과거 정부와의 차별성, 관련 부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정책 반영, 둘째,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사항의 반영과 협약 이행의 의지가 적절하게 표명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정부 보고서에 대한 전반적이고 구체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

제11차 정부 보고서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보고서에 정부 전체 차원의 노력이 결여되었고,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과 계획이 없이 선언적인 내용에 머물고 있다는 문제점을 밝혀 냈다. 또한 정부와 민간단체의 활동을 구분치 않아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인종차별철폐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 일반적인 인권 측면에서 작성된 점과 한국의 특수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었다. 따라서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이행의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 등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다. 위원회는 아울러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평가서에서 제시한 주요 제안 및 권고사항을 기초로 하여 1) 차별금지의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처벌 규정, 2)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반권고 19 관련 정보제공, 3)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 4) 인종적 소수자, 5) 청원 및 법적 절차의 접근성, 6) 교육 및 홍보, 7) 협약 1조 이행 관련 사안, 8) 난민 등의 범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제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2) 「고문방지협약 제2차 정부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1995년 1월 대한민국은 「고문및그밖의잔혹한비인도적인또는굴욕적인대우나 처벌의방지에관한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이하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함(1995.2. 발효)으로써 이 협약에 의거하여 정부는 제1차 정부 보고서를 1996년 5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Committee against Torture)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1996년 11월 정부의 제1차 보고서를 심사한 후 최종 평가서를 작성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후 2002년 2월 외교통상부가 제2차 정부 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원회의 의견을 요청하였다.

제 2 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활동 및 평가

국제인권조약에 따라 각 나라 정부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조약감시기구는 이 보고서를 심사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이러한 심사의 목적과 고문방지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정기 보고서의 기술방법 등을 평가의 전제로 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정부 보고서는 고문방지협약에 의한 국가 보고서 심사제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절차, 방법 및 내용이 결여되어 있었다. 특히 제1차 정부 보고서에 대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심사 이후 고문방지협약의 이행을 위한 국가 정책 및 조치의 진전 여부, 진전이 있었다면 그 내용, 한계 및 개선해야 할 점 등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는 정보가 없었다. 또한 고문방지위원회가 최종 평가서에서 제기한 우려 사항과 권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담고 있지 않아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제2차 정부 보고서를 제출함에 있어 고문방지협약의 이행에 관련된 국가기관들이 동 협약 및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최종 평가서를 충실하게 검토하여 국내법과 제도, 정책과 관행에 관한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며, 그 과정에서 언론기관, 시민인권단체, 학술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한 후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권고하였다.

제2차 정부 보고서 초안에 대한 이러한 전반적인 평가와 함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제1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평가에서 나타난 고문죄에 관한 개념규정, 신문(訊問)의 관행, 고문 관련 책임자의 처벌, 고문 관련 피해자에 대한 구제의 비효율성 등의 ‘우려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제안을 하였다. 아울러 고문방지법의 제정, 전반적인 법의 재검토, 고문 금지 관련 교육 실시, 고문 관련 조사,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 참석 등 최종 평가서의 ‘권고안’에 대한 위원회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3) 「국제형사재판소규정」 가입 권고

제1차 세계대전 직후와 1951년부터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1990년 유엔 총회 결의에서 구체적인 설립 논의가 시작되어 1994년 국제법위원회(International Law Commission)의 초안 작성과 이후

특별위원회, 준비위원회 등을 거쳐 1998년 7월 로마 외교회의에서 「국제형사재판소설립을위한로마규정」이 채택되었다. 규정의 목적은 상설 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여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범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위원회는 2002년 4월 56개국이 이 규정을 비준한 상황에서 비준시 국내법과 저촉 여부 및 가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해 5월 ICC 참여 촉구를 위한 아시아 NGO 홍보단의 방문을 맞이하여 정부 해당 부처에 비준을 권고할 예정임을 표명하였다. 이후 위원회는 법무부 및 외교통상부의 추진계획,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종합하여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인권보호 의지를 국제사회에 실현시키는 것임을 재확인하고, 이미 우리 정부가 2000년 3월 규정에 서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속한 비준을 권고하였다.

ICC 규정에 의해 구성될 국제형사재판소는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인 집단살해죄, 반인도범죄, 전쟁범죄를 범한 자들을 기소·처벌하여 이러한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자는 데 주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범죄들은 국제조약 및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이미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로 인정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1950년 10월 「집단살해죄의방지및처벌에관한협약」 및 1966년 8월 「육전에관한협약」, 「해전에관한협약」, 「포로대우에관한협약」, 「전시에있어서의민간인의보호에관한협약」에 가입하였으며, 1994년 3월 「1949년8월12일자제네바협약에대한추가및국제적무력충돌의희생자보호에관한의정서」가 우리나라에서 발효한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이미 국제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ICC 규정에 가입한다는 것은 분쟁 발발 가능성이 높은 한반도에서 ICC 규정상의 범죄가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것이고, 인도주의적 관점과 최소한의 인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며 상설적인 국제형사재판소는 궁극적으로 국제적·국내적 인권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ICC 규정의 국내적 이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법제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인권 수호국으로서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조

속히 가입한다면 2003년 ICC 재판관 선출시 우리 국적의 재판관 선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2002년 6월 위원회는 정부 관련 부처가 규정의 조속한 가입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이후에도 2002년 7월 「국제형사재판소규정」 관련 학술회의를 후원하고, 2002년 11월 정기국회에 상정된 ‘비준동의안’이 차질 없이 통과되도록 촉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키고 이어 정부는 2002년 11월 13일 규정 비준서를 주(駐)유엔 대표부를 통해 유엔사무국에 기탁함으로써 이 규정의 83번째 당사국이 되었다.

(4)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안」 표결 관련 의견 제출

1991년 1월 코스타리카 정부는 고문방지협약에서 정한 당사국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지원할 목적으로 고문방지소위원회의 구금장소에 대한 정기적 방문권 및 예산지원을 인정하는 내용의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를 제안하였다. 이에 대한 10여 년의 협상 끝에 2002년 4월 제58차 유엔 인권위원회는 의정서 초안을 처리 안건으로 상정, 표결처리함으로써 가결했다. 따라서 의정서 초안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ECOSOC)와 유엔 총회의 심의 및 승인을 얻은 후 공식적 협약으로 각 국가들로부터 비준을 받게 되면(20개 국 이상) 효력이 발생될 것이었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의정서 채택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고문방지를 위한 강력한 국제방문장치 및 국내장치의 마련과 국제적 지원 등에 대한 내용에는 동의하였으나 선택 의정서가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표결을 통해 의정서 초안을 채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아 반대를 하였다. 그러나 이후 국제사회의 여론 등을 감안, 향후 ECOSOC의 표결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종전 입장을 견지할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관계 부처 회의를 열었다. 여기에서 의정서의 채택을 국제인권법 분야의 중요 성과로 파악하고, 채택 단계에서부터의 반대 또는 기권으로 인한 국가 이미지 손상을 우려하는 의견, 국가 사법주권의

침해문제, 분단국가로서 국내 여건을 감안한 채택의 어려움 등 여러 의견들이 개진되었다.

우리 위원회는 ECOSOC의 의정서 채택 과정의 표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위원회는 그 동안 국가구금시설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내적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권한 있는 강력한 국제기구의 실태조사와 개선을 위한 기술적 지원과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파악했다. 따라서 의정서의 채택은 국내 구금시설의 인권 상황을 현저히 변화시킬 계기가 될 것이며, 국가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아, 2002년 7월 고문방지협약선택의정서 초안에 대한 ECOSOC 표결시 대한민국의 입장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관련 기관 회의에 제출하였다.

주요 내용은 우선, 고문방지협약이 실효를 거두려면 협약 당사국인 우리나라가 고문, 비인간적 처우 등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법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의정서 초안은 고문방지협약이 사실상 유명무실화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성안되었다는 것과 고문방지협약의 사후적 구제에 중점을 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성안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도 국제적 흐름과 수준에 맞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위원회법 제24조(시설의 방문조사)는 위원회의 방문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내용을 담은 선택의정서 초안을 우리 정부가 기피하는 것은 인권문제에 대한 이중적 접근 자세로 오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과 주권문제와 인권문제는 조화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ECOSOC 표결에서 선택의정서 채택에 찬성하였다.

(5) 기타 검토 사항

유엔은 제56차 총회 결의에 따라 장애인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권리협약 성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2002년 7월말 멕시코시티에서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서 장애인권리협약 멕시코 초안이 의제로 채택되어 논의 이전에 외교통상부를 경유하여 우리 위원회에 통보되어 왔다.

제 2 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활동 및 평가

위원회는 멕시코 초안에 대하여 조항별로 검토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제출하면서 법률 및 규정에 의한 차별 이외에 ‘정책’에 의한 차별금지를 추가할 것,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서 ‘통신시설’을 추가할 것, 그리고 의료와 재활서비스에 대한 권리의 대상을 장애여성 중 수유모 이외에 ‘임신모’도 추가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이 협약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2003년 5~6월경 개최될 제2차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을 포함하여 좀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은 제32차 아동권리위원회(2003.1.13~31)에 대비, ‘아동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있어서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하여 일반 논평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물어왔다. 이 초안은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독립 국가인권기구 설립을 촉구하고 그 기구의 수임 및 권한, 접근성, 설립과정, 복수대표, 권장활동 및 기술협력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아동의 국가인권기구 접근성, 조사수행 결과의 정책반영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반영하도록 하였다.

4. 인권 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4호에 따라 2002년 인권상황 실태조사 사업을 2차에 걸친 용역사업으로 <표 2-1-8>과 같이 수행하였다.

〈표 2-1-8〉 실태조사 과제

번호	구 분	과 제 명	연구수행자
1	아동 청소년	아동청소년관련 법령 검토(가정폭력방지 관련법)	법무법인해람
		아동청소년관련 법령 검토(청소년보호법)	연세대학교
		아동청소년관련 법령 검토(노동관련법)	동해대학교
		아동청소년관련 법령 검토(아동복지법)	전주대학교
		소년사법 절차상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방안	한양대학교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구축

제 1 장

번호	구 분	과 제 명	연구수행자
2	노인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실태조사	한국노인의전화
		부랑인 시설내 노인인권 현황조사	한국도시연구소
		무료 및 실비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례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	장애인	장애인 특례입학 전형제도 실행 이후 학내 지원체계 현황조사	한국재활복지대학
		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학센터
		취학 연기로 인한 취업연령 제한에 따른 장애인 고용차별 실태조사	동의대학교
		장애인 고용 및 승진실태조사	대구대학교
		민간보험 상의 장애인 차별실태조사	법무법인지평
		장애인 차별실태 자료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방안 연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4	군대	군대내 구금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기초현황 파악	성공회대학교
		군대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 여부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	고려대학교
5	외국인 노동자	국내 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전북대학교
6	고용차별	공무원 고용상의 평등권 침해에 관한 연구	행정개혁시민연합
		B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고용차별 실태조사	서울대보건대학원
7	인권감수성 지표개발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 연구	부산교육연구소
		인권감수성 조사를 위한 지표개발	서울대학교
8	구금시설	유치장 시설환경 인권실태조사	교도소인권모임
		구금시설의 의료실태조사 및 의료권 보장을 위한 연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구금시설 내 진정권 보장 현황 실태조사	원광대학교
9	기 타	시국관련 법령의 입법결정 및 사법결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	건국대학교
		범죄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인권침해 현황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안관찰 대상자의 인권침해 사례조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정보화로 인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법령 조사연구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1) 아동·청소년 인권 관련 실태조사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관련 법령들의 인권침해 여부 및 현실성을 외국이나 국제협약을 기준으로 비교·검토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재검검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검토한 법령은 「가정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청소년성보호법」, 「아동복지법」, 노동관계 법령이다.

「소년사법 절차상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 방안」 연구는 제도의 운용상에서 나타나는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유형과 그 개선방향을 찾고자 법 이론적, 비교법적 연구와 405명의 소년원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조사에 응한 아동·청소년들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억울하거나 가혹한 일을 당했다고 응답한 경우는 61.23%였으며, 검찰 조사단계에서는 23.46%로 나타났다.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에서의 분류심사·조사에 대해서 불만이라고 응답한 소년이 34.86%로 높았으며,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 46.17%였는데 그 이유는 재판과정에서 소년의 정당한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의 사법절차상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구타, 협박, 폭언 등 인권침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제도적, 행정적, 인적, 시설적 요인들을 규명하는 후속 연구들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연구결과였다.

(2) 노인 인권 관련 실태조사

「지역사회에서의 노인학대 실태조사」는 전국(제주도 제외)의 만 15세 이상 75세 미만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와 전국 4개 권역(수도권, 충청·강원권, 영남권, 호남권)에 거주하는 1349명의 노인에 대해 실시한 면접 설문조사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일반인들은 ‘노인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98.3%), ‘노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른다’(90.1%)와 같은 신체적 학대에 대한 인지도

는 높았다. 그러나 ‘노인의 친구나 친척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29.2%), ‘노인이 가족을 타이르거나 의견을 말하면 간섭한다고 불평하거나 화를 낸다’ (36.2%) 등과 같은 정서적 학대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노인들의 학대 빈도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1349명 중 510명 (37.8%)이 1회 이상의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피학 경험이 있는 172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노인은 정서적·언어적·신체적 학대를, 남성노인은 방임·경제적 학대를 더 받고 있으며, 도시 노인들이 농촌 노인들보다, 지병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학대 경험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사회에서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학대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구체적으로 노인학대 방지 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 노인지원 프로그램의 강화, 노인 부양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 및 실비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인권 실태 사례조사**」는 무료·실비 요양시설 종사자 1260명에 대한 우편 조사와 요양시설 11개소 337명의 노인에 대한 판별조사 및 사례조사로 이루어졌다.

종사 직원들의 조사 결과, ‘시설입소나 전원(시설을 옮기는 일) 결정 과정에서 노인의 참여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를 ‘강한 인권침해’로 인식하는 경우가 12.5%에 불과했다. 반면 ‘입소시 시설생활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74.8%), ‘원하지 않는 노인에게 청소나 빨래 등 어려운 일을 시키며’ (85.9%), ‘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방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83.6%) 등에 대해서 ‘약한 인권침해’라고 답했다.

또한 시설거주 노인의 사례조사 결과, 시설 내에서의 직접적인 구타나 노동력 착취 같은 문제들도 있었으나 사생활 침해, 식사 공간 미확보, 식사 서비스 미흡, 주거의 질 저하, 충분한 의료 서비스 부족 등이 인권침해의 중요 내용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발생원인에 대해 종사자들의 47.8%가 거주 노인 개인의 성격이라고 응답했고, 정부의 지원부족(10.4%), 직

원의 과도한 업무부담(6.3%) 등의 답변도 있었다.

노인 요양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관련 연구 결과는 개별 시설의 문제라기보다 요양시설이 인간다운 생활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물적·인적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시설에서 노인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등에 시설 거주 노인의 구체적인 권리 명시, 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인력과 예산지원, 시설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부랑인 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 현황조사**」는 복지시설 수용자 158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설문 응답자 중 30명과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부랑인 시설 입소자 개인의 생애를 살펴보면, 인생의 어느 지점에서 삶의 패턴이 매우 불규칙하고 불안정한 형태로 바뀌는 굴절 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의 굴절이 일어나는 직접적인 동기는 위기상황마다 적절한 안전망 구실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의 사망, 부모의 가출 등과 같은 부모로부터의 지지관계 상실, 배우자의 상실, 건강의 상실(질환이나 장애 발생), 실직, 경제적 실패 등이 부랑인 시설로의 유입을 가속화시키고 있었다. 반면 여성의 굴절 동기는 본인의 실직이나 경제적 실패에 따른 사례가 거의 없었으며, 남편의 음주·학대·도박·외도 등이 대부분이었다. 굴절 시점 직후 생활의 특징은 가족관계가 해체되고 노동의 형태가 변화하며, 일상생활의 규칙이 형클어지고 주거가 불안정해지고, 심리적으로는 삶의 목표나 의욕을 상실하고 노동 의지가 약해져서 활동이 크게 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시설 입소 전에 일정한 거쳐 없이 생활한 기간이 1년 이하로 비교적 짧았던 사람은 입소 전까지 주로 사글셋방이나 친지의 주거지와 같은 ‘집’ (37%), 혹은 ‘여인숙이나 쪽방’ (27%)에서 지낸 반면, 2년 이상 거쳐 없이 지냈던 사람은 입소 직전에 ‘여인숙이나 쪽방’ (40%) 거주 이외에도 노숙(27%)을 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 장애인 차별에 관한 실태조사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 전형제도 실행 이후 학내 지원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는 43개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실태분석과 130명의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2개 대학만이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하였으며, 15개 대학에서 지원 담당자를 두고 있었다. 동료도우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은 11개였으며, 장애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학교는 14개에 불과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시각 및 지체 장애학생, 장애가 심할수록 차별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경우는 도서관이나 전산실 이용 등 기술적 지원을 요구하는 시설에 대한 차별인식 비율이 높았다. 또한 장애학생들은 교수나 강사 등의 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시설 및 교수나 강사 등에 대한 불만으로 휴학을 하는 경우가 전체 조사 장애학생 중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학습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만이 아니라 장애학생 지원전담기구가 설치된 대학은 사립대학교 3개로 국립대학에는 장애학생을 지원해 주는 기구가 설치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가 정상화되어 장애학생들도 비장애학생과 같이 적절한 학습 환경에서 대학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대한 국고지원, 특수학교의 기능 정상화, 2) 장애학생 지원 전담기구의 학내 설치 및 운영, 장애인 교육권 보장의 법제화, 3) 학내 이동 및 접근권 보장, 중증장애인 기숙사 운영, 의료 서비스 제공과 같은 분야별 지원방안 강화, 4) 장애인 고등교육 전담 정부기구 설치 및 기본 지원설비지원과 같은 국가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여성장애인 차별에 관한 사례연구」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나 현재 재학 중인 여성장애인 28명을 심층 면접방식을 통해 조사했다.

대학사회에서 여성장애인이 경험하는 차별의 특성을 보면 대학교육 과정에서 일부 교수들은 여성장애인의 출석을 부르지 않거나 결석을 권하거나 계속 똑같

제 2 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활동 및 평가

은 점수를 주는 등 획일적으로 평가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었다. 가족 내에서도 대학에 진학하도록 격려하지 않거나, ‘위험한 세상으로부터의 보호’라는 이유로 진학을 반대하거나 대학 진학 준비중인 여성장애인을 비웃는 등의 태도를 보임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수학능력 개발을 저해하였다. 그리고 여성장애인을 무성적(無性的) 존재로 규정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여성장애인은 인격이 무시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에도 쉽게 노출되었다.

대학교 여학생 휴게실의 경우 비(非)장애 여성 중심으로 시설과 공간이 마련되어 여성장애인은 이용이 불가능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요구가 남성장애인의 요구에 의해 가려짐으로써,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요구가 비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장애인 집단 내에서도 여성장애인이 차별을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장애인은 교내에서 지나가던 남학생이 도움을 빙자해서 신체접촉을 하는 등 성희롱, 불쾌한 시선, 교직원이나 경비원, 매점 직원 등에 의한 신체접촉 등을 경험하고 있었다.

여성장애인이 대학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체계의 확립을 넘어 성(性)인지적 관점에서 장애학생 지원체계를 재검토해야 하며, 특히 여성장애인 전담 도우미제도의 운영 등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또한 교수, 교직원, 동료 학우들이 여성문제와 장애문제를 동시에 사고할 수 있는 인권교육이 매우 시급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취학 연기로 인한 취업연령 제한에 따른 장애인 고용차별 사례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장애인들의 경우 정규 입학 연령인 만 6세에 입학한 사람이 응답자의 39.3%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그 이유로 장애 치료와 요양을 꼽았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38%는 취학 연거나 휴학을 한 사람으로 취업 연령제한에 걸려 취업을 포기한 적이 있었다. 이 밖에 ‘재활치로나 요양을 받은 것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 취직하지 못하는 것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62.3%가 ‘차별’이라고 답해, 간접차별에 대한 장애인들의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별도의 입법,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현재 위원회법상의 연령 차별금지 규정을 더욱 구체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조사의 결론이었다.

「장애인 고용 및 승진 실태조사」는 장애인 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455개 업체의 인터넷 구인광고를 검토했으며, 22개 업체의 인사규정을 수집하여 공무원 규정과 비교·분석했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모집 및 채용 절차상의 결과적 차별실태는 인터넷에 구인광고를 낸 455개 모집회사 가운데 427개 업체(93.8%)가 채용과정에서 연령제한 등의 방식으로 장애인을 차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방식은 학력 제한(87.8%), 연령 제한(42.6%), 시험이나 면접시 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재(98.9%), 인터넷 서류접수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 부재(82.2%), 신체조건 표기(70.5%) 등이다. 또한 공무원 신체검사 규정상 장애유형별 장애인 차별은 대필 및 시간적 배려 부재(82.4%), 편의시설 미비(71.2%), 상이한 합격기준 적용(23%) 등이다.

임금차별을 경험한 장애인 근로자는 23.3%였으며, 육아 및 산전후 휴가 등에서 차별을 당한 여성장애인 근로자는 31.4%였다. 조사대상 업체의 79.1%가 신체기능 및 정신상의 장애를 이유로 직권면직이나 해고·퇴직 규정을 인사규정에 포함하고 있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복직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애인의 고용 및 승진과정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국민 인식 개선운동, 사회 환경 구축, 보편적 교육 서비스 등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전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적 개입, 모집·채용·해고 단계에서의 차별 해소를 위한 장애인 우대 및 차별 감독 조치 실시, 능력 개발을 위한 기회 균등 보장, 여성장애인 근로자 특별대책과 함께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민간 보험상의 장애인 차별 실태조사」 연구 결과 민간 보험회사의 보험약관 및 상품요약서에 정신적인 장애를 신체의 질병과 구별하여 보상에서 제외하거나 신체장애인의 경우 ‘유진단’이라고 명시하여, 보험가입시 장애의 원인·상

제 2 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활동 및 평가

태·정도 및 보험상품의 종류를 불문하고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생명보험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보험 공통계약심사기준은 ‘말 또는 씹어 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었을 때’ 등 9개 항목을 여전히 인수 불가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어 단지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4개 장애인 시설을 설문조사한 결과 장애인 시설이 가입한 보험으로는 화재보험(31.4%), 가스보험(25.58%), 자동차보험(11.04%)의 순이었으며, 상해보험, 생명보험, 여행자보험 등에 가입한 시설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시설이라는 이유로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화재보험 등의 대인배상 특약 등에 가입하는 것을 거절당했다고 응답한 시설이 약 30%에 달했고,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보험 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한 시설도 42%로 조사되었다.

상법 제732조는 정신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임에도 장애인 차별의 근거가 되고 있어, 상법 제732조에 대한 검토와 인수지침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연구 결과였다.

「장애인 차별실태 자료 분석을 통한 인권의식 개선방안 연구」는 장애인 차별과 관련된 기존의 연구 결과 및 자료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장애인 차별실태 자료 분석」에 따르면 특수교육진흥법 13조와 23조에 장애인 차별금지와 관련한 벌칙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장애인 관련 법률은 차별금지나 인권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세계인권선언, A, B 규약 등은 차별금지에 장애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국·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은 별도의 장애차별금지법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 차별 해소와 인권의식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인권 관련 연구의 활성화가 시급하며,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 전담기구 설치, 국제협약 가입 등 법·제도적 측면의 노력뿐만 아니라 인권교육 및 홍보를 통해 인권의식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4) 군대 내 인권침해 실태조사

「한국 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인정여부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위한 논리를 도출하였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안으로 논의되는 대체복무제는 입법형성의 문제로 단계적인 현실 적합성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헌법 이론적 문제와 국제법적 기준의 적용문제, 국방 현실에 미치는 영향, 국민정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군대 내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는 군부대 내에서의 자살, 구타 및 가혹행위와 관련된 인권 상황 실태를 조사하고, 군인의 인권을 보호, 신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기초연구였다. 현역 232명과 예비역 146명 총 378명이 설문에 응했는데, 설문 응답자 10명 중 6명이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군의 5대 금지사항(집합, 지시, 열차려, 군기교육, 암기강요 행위)과 관련된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이유 없이 구타·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응답도 19%에 달했다. 그리고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했으면서도 군의 적법 절차에 대한 불신으로 응답자의 75%가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 유가족들(34명)은 군 수사당국의 수사 의지와 능력을 불신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외국의 경우 ‘군인법’을 통해 군인의 인권보호를 법으로 명문화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군 옴부즈만제도’, ‘중개위원제도’ 등을 통해 군인 인권을 보호, 신장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인의 인권을 보호, 신장시킬 수 있는 법, 제도적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대 내 구금시설 인권 실태조사를 위한 기초 현황 파악」은 군대 내 폭력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첫 단계로 군대 내의 구금시설을 중심으로 인권 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안을 마련함으로써 군 구금시설의 인권상황 개선방안 마

제 2 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활동 및 평가

련을 연구의 목표로 하였다. 연구 결과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군 구금시설에 수감 경험이 있는 일반인들(87명) 상당수가 구타나 가혹행위, 변호인 접견 등과 관련된 항목들에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현재 수감중인 3명의 수용자와 면접조사한 결과 이들은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한 경험이 없고, 처우에 대해 큰 불편이 없다고 했다. 다만 체포 이후 피의자의 권리나 수사 절차에 대해 면접 대상자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현재 군 구금시설 수용자의 80%가 징계입창에 따른 수용자로, 징계입창은 유엔이 금지하는 ‘자의적 구금’이며, 입창일수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징계항고권이 유명무실해 징계입창제도가 인권침해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5) 외국인노동자 인권 실태조사

외국인노동자 1078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현재 공식적으로 산업연수생 입국비용이 340~1300달러이나 실질적인 평균 비용은 3800달러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외국인노동자의 대부분이 장시간 노동하고 있었으며, ‘휴일에는 일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9.8%에 불과했다. 임금체불을 당한 경험은 전체의 51.4%에 이르며, 미등록 노동자 10명 중 5명 이상이 임금체불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다.

외국인노동자가 입국 후 성희롱을 당한 경험은 12.5%에 이르며, 성희롱 가해자는 직장상사, 한국인 직장동료 등이었다. 성희롱은 대개 언어적 희롱(87.1), 추근거림(60.0), 신체접촉(33.3%)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매춘 요구도 27.1%나 되었다. 또한 조사 대상 외국인노동자의 상당수는 자신의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모르고 있으며(산업재해보상보험·고용보험 42.4%, 건강보험 42.8%, 국민연금 51.5%), 산업재해를 경험한 횟수는 1회 51.3%, 2회 32.5%였다.

출입국관리소 직원이나 경찰관의 검문·검색 당시 경찰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응답이 49.1%, 검문·검색의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40.5%, 다른 장소로 끌려갔다는 사람이 19.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연수 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 더불어 외국인노동자 송출 및 관리를 정부(노동부)로 일원화하고, 한국인 고용주나 관리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인권침해 예방 대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국내거주 외국인 노동자 인권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는 제안하고 있다.

또한 연구진은 한국어와 영어를 포함하여 방글라데시, 중국, 인도네시아, 몽골,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쓰는 총 14개 언어로 질문지를 직접 제작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6) 고용차별 실태조사

「공무원 고용상의 평등권 침해에 관한 연구」는 공무원 고용정책에 있어 공무원 입문자로서 요구되는 조건이 고용에서의 평등권과 상충되는 바가 없는가를 분석하고, 상충될 경우 특별요건의 타당성 검토,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공무원 고용상 연령제한은 법 해석의 면에서 평등권, 취업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연령에 의한 차별의 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근거의 정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부문에서의 연령제한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정책을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제도는 청장년층의 취업 전 사회경험을 제약하고 있으며, 고령층에게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개선 및 정책방향은 점진적인 방식으로 공공부문의 제도를 모델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할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연령제한

폐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조치 마련과 더불어 합리적으로 연령제한을 규정하는 입법화가 궁극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 연구 결과이다.

「**B형간염 바이러스 보균자에 대한 고용차별 실태조사**」는 채용시 신체검사를 받은 근로자 중 간 기능에 이상이 없는 B형간염 보균자 71명과 B형간염 보균자가 아닌 41명 등 총 112명에 대해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B형간염은 실제로 식사 또는 술자리를 통해 전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비(非)보균자 중 46.0%가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해, B형간염의 전염경로에 대한 인식이 왜곡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B형간염 바이러스가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많은 비보균자들은(51.5%) ‘B형간염 보균자의 노동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 비보균자의 47.2%는 ‘별다른 요인이 없어도 간암 등으로 악화될 것’으로 생각하는 등 질병의 자연적 경과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비보균자는 B형간염에 대한 이해도가 보균자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 현황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B형간염 보균자의 62.0%만이 취업에 성공한 반면, 비보균자는 87.8%가 취업에 성공하였다. 또한 차별에 대한 주관적 느낌을 조사한 결과, 보균자군의 21.1%가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느끼고 있는 반면, 비보균자군은 4.9%만이 차별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보균자군은 신체검사 결과가 차별의 중요한 기제로 작용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7) 인권감수성 지표 개발 실태조사

「**인권 감수성 조사를 위한 지표개발**」은 국민의 인권의식 조사연구의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인권 감수성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 도구를 개발하여 인권교육 국가 기본계획수립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지표개발은 상황지각능력, 결과지각능력, 책임지각능력으로 구성되는 인권 감수성 검사모형과 이 모형에 근거한 인권 관련 리커르트 검사문항 및 측정방

법을 개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초·중·고·대학생 및 성인 734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한 결과 중학생 이상 성인의 인권 감수성 측정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교사의 인권의식 조사 연구」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사 1560명을 대상으로 교사의 인권의식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교사들은 교사의 권리와 관련된 문항에서 절반 이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반면, 학생과 학부모의 권리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학생이 체벌 이외의 방법으로 처벌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매우 중요하다’ 또는 ‘중요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50세 이상 교사는 8.5%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 39.2%가 ‘중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사의 인권교육 경험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84%가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답했으며, 단 2%만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협약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교사들은 사회현안이 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보호 △여성인권 △장애인 및 아동인권보호 △재소자의 인권보호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응답자의 90.1%가 ‘인권교육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교사의 인권의식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에 대한 체계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연수과정 실시, 학교 공동체 인권교육 지침 개발 및 보급, 공동참여 인권 학습 프로그램, 인사와 승진 제도의 개선,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새로운 관계가 절실함을 일깨워 주었다.

(8) 시국 관련 법령의 입법결정 및 사법결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

이 연구에서는 크게 3가지 연구결과를 얻었다. 첫째 법원,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 분석 결과 지배 이데올로기적인 법 담론으로 시국 관련 법령의 입·사법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 둘째 시국 관련 사건에 대한 소극적인 사법결정의 구

제 2 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활동 및 평가

체적인 이유들로 헌법 제37조제2항을 통치 권력에 의한 지배이데올로기의 정당화 도구로 이해·이용한 점, 실체법적 제한과 절차법적 제한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한 점, 법원과 법조계 중심의 조직논리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헌법 판단요소 중의 한 가지로 시민권 개념이 확보될 필요가 있는데, 시민권은 단순히 기본권 향유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동태적으로 일정한 생활관계를 이루고 있는 개개인들이 자신이 속한 생활공동체에서 의미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제기하면서 시국 관련 법령 적용 지침을 개발하기 위한 분석이 앞으로 필요함을 주장했다.

제3절 평가

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인권 관련 법령 검토 및 권고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출범 첫해의 여러 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테러방지법 제정문제, 산업연수생 제도 등에 대한 개선 권고 등을 통해서 정부가 정책 입안 및 집행시 인권을 중요한 가치기준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여러 정책 권고를 통하여 그 동안 시민사회 영역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왔으나 정부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던 사안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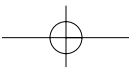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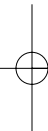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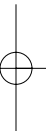
또한, 지금까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구금보호시설, 군대내 교도소 등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고 외국인노동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의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인권 실태조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 실상을 파악하여 위원회의 인권정책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기관이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고, 인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 점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위원회법에 국가기관 등이 인권 관련 법령 제·개정시 위원회에 통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가 각 부처에 공문을 발송하여 협의절차 준수를 요구하였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위원회의 홍보 부족과 한편으로는 관련 부처의 인식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위원회는 출범 원년의 어려운 여건상 미처 다루지 못하였던 국가보안법, 과거청산, 사형제도 폐지 등 이른바 우리 사회의 현안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할 예정이다.



제2장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체계 구축

제1절 개요

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진정 혹은 상담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욱 편리한 방식으로 위원회에 접근하고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 가능성을 등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접근 경로와 체계를 구축하였다.

위원회는 설립 초기부터 전화, 방문(대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진정접수를 받았으며, 면전 진정제도를 통해 구금·보호시설에 있는 수용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고 진정을 접수하는 등 현장 중심의 권리구제 체계의 기반을 다졌다. 또한 위원회의 역할 및 업무영역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아직 정착되지 않음에 따라 분출되는 다양한 요구와 문제에 대해서도 귀 기울여 듣고 안내 및 회신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는 등 민원안내와 인권상담 기능을 강화하였다. 특히 인권·시민단체 활동 경력자와 인권·상담·법률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경력자들을 전문상담원으로 위촉하여 전화상담과 대면상담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인권상담과 진정접수 체계의 조기 정착화를 이루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의 인권향상과 보호를 위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된 진정서를 구비하고,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우리 말에 익숙지 않은 외국인들도 쉽게 진정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였다.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 상담 및 진정접수의 활성화

(1) 인권상담 서비스 확충

위원회는 기존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민원실의 기능을 뛰어넘어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좀더 가깝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듣고, 법과 제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이나 대안을 함께 찾기 위한 인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인권침해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이에 대한 합법적인 구제 및 회복을 위해 다시 공권력에 의존하는 과정에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이해를 얻지 못하거나 또다시 부당한 대우를 받음으로 인해 상실감과 분노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에게 공권력 행사의 과정과 절차, 그리고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제도적 해결을 위한 절차 및 정보를 제공하고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권상담 서비스를 위해 위원회는 전화 전용선을 확보하고(전화번호 1331), 진정접수를 원하는 사람들이 전문상담원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구금·보호시설 수용자들을 위해 해당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인권상담과 진정접수를 실시함으로써 기동성 있고 적극적인 현장 중심의 상담과 권리구제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2) 진정 및 상담접수 현황

위원회가 진정을 접수하기 시작한 2001년 11월 2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까지 진정사건이 3593건, 상담이 3249건, 안내가 9417건으로 총 1만 6259건

에 이르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2001년 12월에는 진정접수, 상담, 안내건수가 총 2015건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다. 특히 위원회의 사무처 구성이 늦

〈표 2-2-1〉 월별 진정, 상담 및 안내 현황(2001. 11. 26 ~ 2002. 12. 31)

(단위 : 건)

민원 경로 월	진 정					상 담				안 내				총 계
	방문		전화	아우팩	계	방문		전화	계	방문	전화	민원 회신 (아우팩)	계	
	대면	면전				대면	면전							
2001. 11	118	-	103	72	293	31	-	104	135	21	555	-	576	1,004
2001. 12	129	5	101	271	506	97	3	143	243	108	1,158	-	1,266	2,015
2002. 1	62	8	34	160	264	50	2	43	95	91	943	4	1,038	1,397
2	33	7	19	89	148	13	-	17	30	103	819	9	931	1,109
3	27	29	31	143	230	39	2	17	58	102	803	19	924	1,212
4	38	36	16	135	225	53	7	71	131	47	789	6	842	1,198
5	35	55	16	135	241	36	9	97	142	52	444	8	504	887
6	19	29	8	101	157	24	11	105	140	47	318	48	413	710
7	26	56	19	153	254	51	31	165	247	44	359	87	490	991
8	34	49	15	134	232	49	25	192	266	45	314	76	435	933
9	48	79	2	102	231	40	47	168	255	35	300	50	385	871
10	29	49	7	100	185	68	38	248	354	47	340	74	461	1,000
11	54	86	11	143	294	137	68	451	656	46	483	92	621	1,571
12	33	68	19	213	333	79	64	354	497	27	445	59	531	1,361
누계	685	556	401	1,951	3,593	767	307	2,175	3,249	815	8,070	532	9,417	16,2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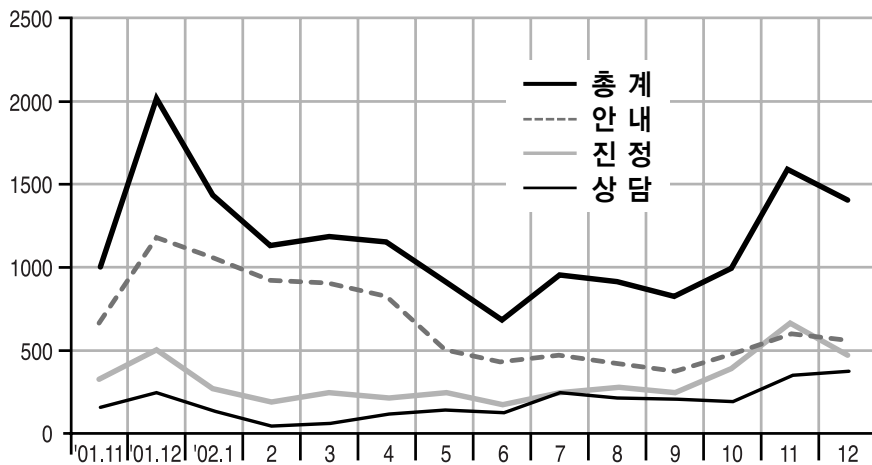
제 2 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활동 및 평가

어지면서 약간씩 감소추세를 보이던 진정과 상담건수는 2002년 4월에 사무처가 구성되고 조사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7월을 기준으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12월 말 현재에는 위원회 설립 초기의 접수 건수에 육박하였다.

〈그림 2-2-1〉 월별 진정, 상담 및 안내 현황

(단위 : 건)



2002년 10월 이후에는 급격하게 진정, 상담 및 안내건수가 증가했는데 이는 10월 말 서울지방검찰청의 피의자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고 이에 대해 위원회가 직권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가. 진정접수

진정의 경우 접수 경로별로 방문, 전화, 이메일·우편·팩스로 구분하고 방문을 통한 진정접수는 다시 ‘대면’과 ‘면전’으로 분류하였다. ‘대면’은 진정인이 직접 위원회를 방문하여 진정을 접수하는 것이고, ‘면전’은 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이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수용자를 면담한 후 진정을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면전진정 제도는 구금·보호시설 수용자의 자유로운 진정권을 보장하

기 위한 획기적인 제도로, 외부와의 접견과 교통이 자유롭지 못한 수용자들이 위원회의 위원 혹은 직원을 만나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위원회법 제31조가 보장하고 있는 진정접수 방법이다.

진정의 경우 이메일·우편·팩스 등 통신을 이용한 문서접수가 1951건으로 전체 진정접수 건수 중 54.3%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대면진정이 685건으로 19.1%를 차지했으며, 면전진정을 통한 접수는 556건으로 총 진정건수의 15.4%를 차지했다. 또한 전화를 통해 접수한 것은 총 401건으로 11.2%를 차지했다.

나. 상담 및 안내

〈표 2-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담의 경우는 전화상담이 2175건으로 전체 상담건수의 66.9%를 차지하였고, 위원회를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한 경우는 767건으로 23.6%를 차지했다. 면전상담은 307건으로 전체 상담의 9.5%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구금·보호시설 수용자들이 면전진정 의사를 밝힘에 따라 위원회 직원이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이들을 면담한 결과, 현지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거나 신청인이 진정접수보다는 상담만을 원하는 등의 이유로 인해 상담종결 처리한 경우이다.

사무처가 구성된 2002년 4월부터 인권상담 서비스가 본격화됨에 따라 상담 건수는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8월부터는 진정건수보다 상담건수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로별로 보면, 진정의 경우에는 전화를 통한 접수보다는 직접 위원회를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면전진정을 통해 접수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반면 상담의 경우에는 전화를 통한 상담이 2175건(66.9%)으로 방문(대면)을 통한 상담 767건(23.6%)보다 많았다.

또한 이메일, 우편, 팩스 등 서면을 통해 접수되는 각종 민원성 문의와 질의사항에 대해 안내, 회신처리 건수도 하반기 이후 증가함에 따라 더 폭넓고 적극적인 인 인권상담 및 안내 서비스가 확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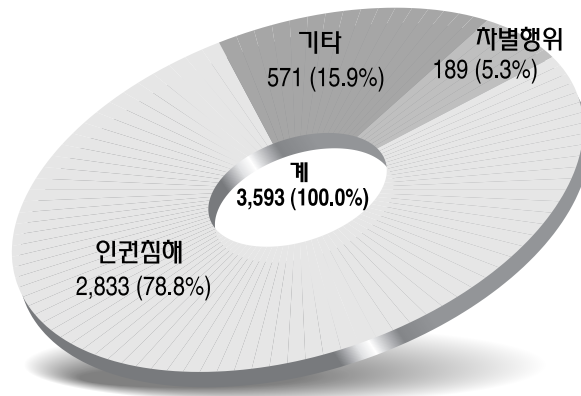
2. 진정사건 및 상담사례 유형 분류

(1) 진정사건 유형분류

진정사건은 크게 인권침해, 차별행위 및 기타 사건으로 분류하였다. 진정접수된 총 3593건 중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사건은 2833건으로 전체의 78.8%를,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사건은 189건으로 5.3%를 차지함으로써 차별행위에 비해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건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사건은 571건으로 전체의 15.9%를 차지하였다.

〈그림 2-2-2〉 진정사건 분류(2001. 11. 26 ~ 2002. 12. 31)

(단위:건)



인권침해 사건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받은 사건으로 유형에 따라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입법기관, 기타 국가기관, 구금시설, 보호시설, 군검찰, 군헌병, 국군기무사령부, 군교도소·군구치소 등 군구금시설, 기타 군 관련 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로 세분류를 하였다.

차별사건은 1)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에 의한 평등권 침해, 2)장애, 병력,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성별,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상황, 성적지향, 나이, 용모 등 신체 조건,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등을 이유로 한 ①고용, ②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토지·주거시설 등의 공급이나

〈표 2-2-2〉 진정사건 유형별 분류(2001. 11. 26 ~ 2002. 12. 31)

(단위:건)

진정사건 3,593건(100.0%)					
인권침해 2,833(78.8%)		차별행위 189(5.3%)		기타 571(15.9%)	
계	2,833(100.0)	계	189(100.0)	계	571(100.0)
검찰	300(10.6)	평등권침해	38(20.1)	사인간 침해	131(23.0)
경찰	839(29.6)	장애	32(16.9)	회사	43(7.5)
국가정보원	33(1.2)	병력	10(5.3)	기타단체	8(1.4)
특별사법경찰관리	31(1.1)	사회적 신분	40(21.2)	재산권침해	40(7.0)
지방자치단체	66(2.4)	출신지역	5(2.6)	법령, 제도	137(24.0)
사법기관	70(2.5)	출신국가	19(10.1)	입법, 재판	39(6.8)
입법기관	1(0.0)	출신민족	0	기타	173(30.3)
기타국가기관	236(8.3)	인종	1(0.5)		
구금시설	1,113(39.3)	피부색	1(0.5)		
보호시설	34(1.2)	성별	9(4.8)		
군검찰	4(0.1)	혼인여부	2(1.1)		
군헌병	41(1.4)	임신·출산	0		
국군기무사령부	6(0.2)	가족상황	1(0.5)		
군구금시설	3(0.1)	성적지향	4(2.1)		
기타군관련기관	56(2.0)	나이	5(2.6)		
		용모 등	2(1.1)		
		종교	6(3.2)		
		정치적 의견	4(2.1)		
		전과	7(3.7)		
		기타	3(1.6)		

제 2 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활동 및 평가

이용, ③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의 이용에 있어서의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차별행위로 분류하였다.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총 2833건 중에서 1113건이 교도소 등 구금시설을 상대로 한 진정으로 진정건수의 39.3%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경찰과 검찰을 상대로 한 진정으로 이들은 각각 839건, 300건으로 인권침해 사건 중 29.6%, 10.6%를 차지하였다. 이로써 구금시설과 경찰·검찰 등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차별행위와 관련한 진정은 총 189건이 접수되었다. 이 중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에 의한 평등권 침해가 38건으로 진정건수의 20.1%를 차지하였다. 위원회법 제30조제1항은 법인, 단체, 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하여 18가지 차별사유와 3가지 차별영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 중의 평등권 침해(헌법 제11조)에 대해서는 차별사유와 영역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폭넓은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관이나 시설에 의한 차별행위는 그 영역을 18가지 사유에 제한하지 않고 ‘평등권 침해’로 분류하였으며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 구금시설 내 수용자간 차별적 처우, 국립기관의 시설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총 571건이 접수된 기타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폭력, 사기 혹은 재산권과 관련된 개인간의 다툼으로 별도의 구제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사건과 법령, 제도에 대한 문제제기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기타사건 중에서도 다시 기타로 분류된 사건들은 상당히 다양한 내용들로, 예컨대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한 불만, 가족의 묘지이장 문제 등이 있고, 주장하는 내용이 현실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들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2) 상담사례 분석

가. 상담처리 결과

〈표 2-2-3〉 상담처리 결과(2001. 11. 26 ~ 2002. 12. 31)

처리유형	처리 이유	계(%)	대면(%)	전화(%)
	계	2,861(100.0)	719(100.0)	2,142(100.0)
상 담 종 결	소 계	1,403(49.0)	435(60.5)	968(45.2)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558	197	361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종결됨	157	60	97
	진술내용의 현실성, 신빙성 결여	126	53	73
	내담자가 상담만을 원함	124	12	112
	조사가능 기간 도과	105	37	68
	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됨	43	5	38
	이미 진정한 사건에 대한 상담	28	6	22
	구체적 주장내용 없음	26	10	16
	기타	236	55	181
타기관 안 내	소 계	501(17.5)	70(9.7)	431(20.1)
	보다 적절한 기관 안내	488	66	422
	내담자가 타기관을 문의	9	2	7
	기타	4	2	2
진 정 예 정	소 계	371(13.0)	26(3.6)	345(16.1)
	우편, 팩스 등 다른 방법으로 진정 예정	266	9	257
	고려 후에 진정 예정	34	5	29
	서류 등을 구비하여 진정 예정	23	7	16
	조사대상은 아니나 내담자가 원함	13	2	11
	사건의 추이를 보고 진정 예정	9	0	9
	재상담 후에 진정 예정	9	0	9
	기타	17	3	14
재상담 예 정	소 계	299(10.5)	36(5.0)	263(12.3)
	전화상담 후 방문상담 예정	149	3	146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상담 예정	44	8	36
	사건의 추이를 보고 다시 상담 예정	36	6	30
	내담자가 계속 상담을 원함	32	8	24
	상담시간의 부족 또는 과다로 재상담 예정	8	2	6
	기타	30	9	21
진 정* 접 수	소 계	185(6.5)	142(19.7)	43(2.0)
	조사대상은 아니나 내담자가 강력하게 원함	82	64	18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임	78	62	16
	조사대상인지는 불분명하나 위원회의 판단을 받고 싶어함	18	11	7
	제도개선 등(단순히 사건을 위원회에 알리고 싶어함)	5	4	1
	기타	2	1	1

제 2 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활동 및 평가

처리유형	처리 이유	계(%)	대면(%)	전화(%)
기 타	소 계	102(3.5)	10(1.5)	92(4.3)
	상담도중 전화 끊김	49	0	49
	조사담당자 안내	8	3	5
	상담도중 내담자가 자리를 뜰	2	2	0
	기타	43	5	38

※ 총 3249건의 상담 중 면진진정 접수과정에서 상담종결된 307건은 면진진정 접수의 활성화 부분에서 별도로 분석했으며, 진정접수를 시작한 초기에 상담시스템 미비로 인해 간단한 상담의 경우 기록을 남기지 않은 81건을 제외한 2861건에 대해서만 분석함.

* 전화와 방문(대면)을 통해 진정을 하는 경우에 대부분은 오랜 시간 상담과정을 거친 후에 정식으로 진정을 접수하며, 인권상담 서비스가 정착화되면서 이러한 경우가 증가하였음. 따라서 2002년 9월까지의 상담을 한 후에 진정을 접수한 경우 '진정'으로 처리하였으나, 2002년 10월부터는 상담을 한 후 진정을 접수한 경우에 '상담'과 동시에 '진정'으로 분류하였음. 따라서 상담처리 결과에 진정접수 항목이 10월부터 추가되었음.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담 후 종결된 경우가 1403건으로 49.0%이며, 다른 기관을 안내한 경우가 501건으로 17.5%였다. 상담종결된 사례들은 주로 상담내용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 혹은 재판이 진행·종결된 경우, 혹은 진술내용에 현실성 등이 결여된 경우, 내담자가 상담만을 원한 경우, 조사가능 기간이 도과한 경우, 상담만으로 문제가 해결된 경우 등이었다. 타기관을 안내한 것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지방노동사무소 등 내담자가 좀더 적절한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준 경우이다.

진정예정으로 처리된 371건(13.0%)은 주로 상담을 한 후에 신중히 고려하거나 필요한 서류 등을 구비하여 우편이나 기타 방법으로 추후에 진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이다.

재상담하기를 원한 299건(10.5%)은 주로 여러 가지 사안이 병합된 복잡한 사건으로, 전화상담을 한 후에 사건과 관련된 서류들을 가지고 다시 위원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겠다고 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진정접수로 분류된 185건(6.5%)에는 조사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진정인이 강력하게 요구하여 접수한 것이 82건, 조사대상에 해당되는 것 78건 외에 조사대상 여부를 떠나 자신의 사건에 대해 위원회의 검토와 판단을 받아보길 원하는 18건 등이 포함되었다.

기타에 해당하는 102건(3.5%)은 중간에 전화가 끊어지거나, 내담자의 사정으

로 인해 상담을 중단한 경우 등이다.

대면상담은 진정을 접수한 경우가 19.7%로, 2.0%를 나타내고 있는 전화상담의 경우보다 많은데 이는 이미 전화상담을 거친 후 직원과 직접 만나 재상담을 하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진정접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화상담의 경우는 대면상담에 비해 타기관을 안내받거나 재상담 혹은 추후 진정예정 의사를 밝힌 경우가 많은데, 이는 위원회의 업무범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단 상담을 하기 위해 다소 번거로운 방문절차보다는 간단한 전화를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상담 유형별 분류

〈표 2-2-4〉 상담 유형(2001. 11. 26 ~ 2002. 12. 31)

(단위:건)

사건유형	계(%)	대면상담(%)	전화상담(%)
계	2,676(100.0)	577(100.0)	2,099(100.0)
인권침해	1,022(38.2)	184(31.9)	838(39.9)
차별행위	212(7.9)	53(9.2)	159(7.6)
기타	1,442(53.9)	340(58.9)	1,102(52.5)

※ 2861건 중 동일한 사건에 대해 진정접수를 한 185건은 진정사건에 포함되어 통계처리되므로 진정사건과 차별화하여 상담사례만을 분석하기 위해 185건을 제외한 2676건을 대상으로 분류함.

상담으로 종결된 사건들은 진정으로 접수되지 않은 만큼 인권침해나 차별사건에 해당되기보다는 이 범주를 벗어난 기타 사건의 경우가 많았다. 즉, 인권침해 관련 사례는 1022건으로 전체 상담의 38.2%, 차별행위 관련 사례는 212건으로 7.9%를 차지한 반면 기타 사건은 1442건으로 53.9%를 차지하였다. 대면상담과 전화상담에서 상담 유형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인권침해 상담

1) 기관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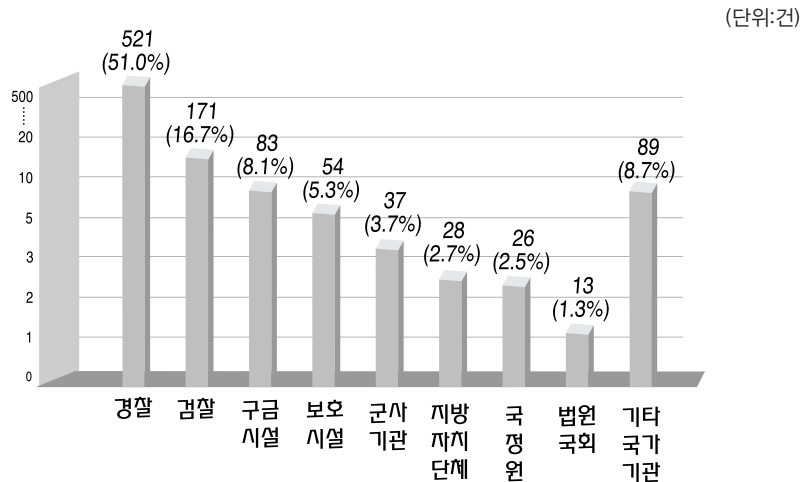
진정사건의 경우에는 구금시설과 관련한 것이 많은 것에 비해(39.3%) 상담의

제 2 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활동 및 평가

경우에는 경찰의 인권침해에 관한 것이 5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이 검찰로 16.7%를 차지했다. 기타 국가기관(공사·공단·공법인 등)과 구금시설은 각각 8.7%, 8.1%를 차지하였다. 진정사건에 비해 상담사례의 경우 구금시설과 관련한 것이 적은 이유는 시설 수용자들은 전화나 위원회 방문을 통한 대면상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면전진정을 통해서만 상담을 할 수 있다는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2-2-3〉 피진정기관별 분류(2001. 11. 26 ~ 2002. 12. 31)



2) 내용별 분류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내용을 기관별로 분류해 보면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과 관련해서는 ①편파수사, 사건조작·은폐 ②폭행, 협박, 가혹행위 등 신체의 자유침해 ③욕설, 면박, 모욕, 불친절 등 인격권 침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기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해서는 ①행정행위의 잘못, 지연, 거부 ②도청, 감시 등 사생활의 자유침해 ③욕설, 면박, 모욕, 불친절 등 인격권 침해를 호소하는 경우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금시설과 관련한 상담은 ①접견거부나 부적절한 의료조치 ②폭행, 협박, 가

혹행위 등 신체의 자유침해 ③수용자간의 폭력 방치에 관한 것이 많았으며, 보호시설과 관련해서는 ①강제수용 또는 퇴원거부 ②폭행, 협박, 가혹행위 등 신체의 자유침해에 대한 상담이 가장 많았다.

군사기관과 관련한 상담은 ①의문사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 ②부대 내에서의 폭행과 협박 등 가혹행위에 대한 것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표 2-2-5〉 인권침해의 내용

유 형		계	대면	전화
계		1,022(100.0%)	184(100.0%)	838(100.0%)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소 계	718(70.3)	136(73.9)	582(69.5)
	편파수사, 사건조작·은폐	203	46	157
	폭행, 협박, 가혹행위 등 신체의 자유침해	148	17	131
	욕설, 모욕, 면박, 불친절 등 인격권 침해	56	8	48
	도청, 감시 등 사생활의 자유 침해	52	17	35
	범죄사실 미수사 등 직무유기	44	11	33
	관련 규정에 반한 불법체포, 감금	43	7	36
	함정수사, 진술강요 등 적법절차 위반	34	5	29
	위압적인 수사·수사권 남용	28	3	25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로 처리됨	27	8	19
	범인으로 잘못 지목됨	20	2	18
	공소권 남용에 의한 부당한 기소	16	8	8
	개인정보 유출(수시적성검사 등)	10	0	10
	시건처리과정 불고지 등 알권리 침해	8	1	7
	불심검문	8	0	8
	기타	21	3	18
기타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소 계	117(11.4)	25(13.6)	92(11.0)
	행정행위의 잘못, 지연, 거부 등	24	6	18
	도청, 감시 등 사생활의 자유 침해	16	4	12
	욕설, 모욕, 면박, 불친절 등 인격권 침해	15	6	9
	폭행, 협박, 가혹행위 등 신체의 자유침해	12	2	10
	강제출국 조치 (주로 이주 노동자)	11	2	9
	개인정보 유출	7	0	7
	정보공개 청구 불응 등 알권리 침해	6	1	5
	기타(미군의 폭행사건, 보안관찰 등)	26	4	22

제 2 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활동 및 평가

유 형		계(%)	대면(%)	전화(%)
법원, 국회	소 계	13(1.3)	3(1.7)	10(1.2)
	욕설, 모욕, 면박, 불친절 등 인격권 침해	4	0	4
	기타	9	3	6
구금시설	소 계	83(8.1)	7(3.8)	76(9.1)
	접견거부, 부적절한 의료조치	33	1	32
	폭행, 협박, 가혹행위 등 신체의 자유 침해	13	3	10
	수용자간 폭력 방치	10	3	7
	부당징벌	7	0	7
	청원, 진정 등의 방해 및 불이익	6	0	6
	욕설, 모욕, 면박, 불친절 등 인격권 침해	3	0	3
	기타	11	0	11
보호시설	소 계	54(5.3)	8(4.3)	46(5.4)
	강제수용 또는 퇴원거부	24	1	23
	폭행, 협박, 가혹행위 등 신체의 자유 침해	18	6	12
	강제적인 치료·약물 투여	1	0	1
	기타	11	1	10
군사기관	소 계	37(3.6)	5(2.7)	32(3.8)
	군의학문사 규명 요구	16	3	13
	폭행, 협박, 가혹행위 등 신체의 자유 침해	14	2	12
	욕설, 모욕, 면박, 불친절 등 인격권 침해	2	0	2
	도청, 감시 등 사생활의 자유 침해	0	0	0
	기타	5	0	5

라. 차별행위 상담

〈표 2-2-6〉 피진정인별 현황(2001. 11. 26 ~ 2002. 12. 31)

(단위 : 건)

피진정인	계(%)	대면(%)	전화(%)
계	212(100.0)	53(100.0)	159(100.0)
국가기관 등 *	145(68.4)	45(84.9)	100(62.9)
법인·단체·사인	67(31.6)	8(15.1)	59(37.1)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 포함

국가기관 등에 의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문제를 상담한 경우가 68.4%로 법인·단체·사인에 의한 차별사례 31.6%보다 높게 나타났다. 경로별로 보면 대면상담이 전화상담보다 국가기관 등에 의한 차별행위를 호소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차별사유

〈표 2-2-7〉 피진정인별 차별사유(2001. 11. 26 ~ 2002. 12. 31)

(단위 : 건)

차별사유	계(%)	국가기관 등(%)	법인·단체·사인(%)
계	212(100.0)	145(100.0)	67(100.0)
장애	19(9.0)	6(4.1)	13(19.4)
사회적 신분	19(9.0)	12(8.3)	7(10.4)
출신국가	13(6.1)	6(4.1)	7(10.4)
병력	8(3.8)	5(3.4)	3(4.5)
성별	8(3.8)	2(1.4)	6(9.0)
나이	6(2.8)	4(2.8)	2(3.0)
출신지역	4(1.9)	1(0.7)	3(4.5)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4(1.9)	3(2.1)	1(1.5)
용모 등 신체적 조건	3(1.4)	1(0.7)	2(3.0)
혼인여부	3(1.4)	0	3(4.5)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3(1.4)	2(1.4)	1(1.5)
종교	2(0.9)	1(0.7)	1(1.5)
가족상황	1(0.5)	0	1(1.5)
성적 지향	1(0.5)	1(0.7)	0
출신민족	0	0	0
임신 또는 출산여부	0	0	0
인종	0	0	0
피부색	0	0	0
기타	118(55.6)	101(69.6)	17(25.3)

※ 위원회법 제30조는 법인·단체·사인에 의한 차별행위와는 달리 국가기관 등에 의한 차별행위에 대해 그 사유와 영역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편의상 법인·단체·사인에 의한 차별행위와 같은 기준으로 분류함

제 2 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활동 및 평가

국가기관 등에 의한 차별과 법인·단체·사인에 의한 차별상담 사례 모두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국가에 의한 차별이 많았다. 단, 장애에 의한 차별상담의 경우에는 국가기관 등(4.1%)보다는 법인·단체·사인(19.4%)에 의한 차별사례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에 해당하는 것은 내담자 스스로가 어떠한 기준이나 사유로 인해 차별을 받았는지 모르며 차별받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 경우이다.

2) 차별영역

〈표 2-2-8〉 차별 영역(2001. 11. 26 ~ 2002. 12. 31)

(단위 : 건)

차별영역		계(%)	국가기관 등(%)	법인·단체·사인(%)
계		212(100.0)	145(100.0)	67(100.0)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		90(42.6)	90(62.1)	0
고 용	채용·모집	34(16.0)	17(11.7)	17(25.5)
	승진·인사	18(8.5)	5(3.4)	13(19.4)
	퇴직·해고	7(3.3)	1(0.7)	6(8.9)
	임금 등	9(4.2)	2(1.4)	7(10.4)
재화·용역 등의 공급		26(12.3)	16(11.0)	10(14.9)
교육시설 등의 이용		5(2.3)	2(1.4)	3(4.5)
기 타		23(10.8)	12(8.3)	11(16.4)

차별의 주체별로 차별영역을 살펴보면 국가기관 등에 의한 차별은, 검찰의 부당한 불기소 처분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 사례가 가장 많은 62.1%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채용·모집에서의 차별이 11.7%, 재화·용역 등의 공급에서의 차별이 11.0%를 차지하였다.

법인·단체·사인에 의한 차별사례는 채용·모집에서의 차별이 25.5%, 승진·인사에서의 차별에 대한 상담이 19.4%를 차지하였으며, 재화·용역 등의 공급에서의 차별이 14.9%로 나타났다. 국가기관 등이나 사인 등에 의한 차별 관련 상담의 공통점은 채용, 모집, 승진, 인사, 퇴직, 해고, 임금 등과 같이 고

용과 관련한 영역에서 일어난 차별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기타는 열악한 작업환경에 대한 불만, 집단 따돌림에 의한 어려움 등 차별영역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마. 기타 상담

〈표 2-2-9〉 기타 유형(2001. 11. 26 ~ 2002. 12. 31)

(단위 : 건)

유 형	계(%)	대면(%)	전화(%)
계	1,442(100.0)	340(100.0)	1,102(100.0)
사인 등에 의한 인권침해	675(46.8)	181(53.2)	494(44.8)
국가기관에 의한 기타 침해	190(13.2)	46(13.5)	144(13.1)
법률문의, 업무문의	124(8.6)	20(5.9)	104(9.4)
재판지연, 부당한 재판 등 사법기관에 대한 불만	103(7.1)	23(6.8)	80(7.3)
제도개선 요구 및 건의	80(5.6)	12(3.5)	68(6.2)
위원회 업무에 대한 불만	46(3.2)	5(1.5)	41(3.7)
기타	224(15.5)	53(15.6)	171(15.5)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상담사례 1442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사인간의 분쟁이나 다툼·폭행과 관련한 경우가 46.8%, 국가기관에 의한 재산권 침해 등 기타 피해를 당했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13.2%, 일반적인 법률상담 및 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문의가 8.6%, 재판과 관련한 불만이 7.1%, 제도개선 요구 및 건의가 5.6%, 위원회 업무처리에 대한 문제제기가 3.2%, 기타 상담을 요구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15.5%를 차지했다.

3. 면전진정 접수의 활성화

위원회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면전진정 접수제도는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혁신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위원회가 진정을 접수하기 시작한 뒤 구금·보호시설 수용자들의 면전진정 신청이 계속 증가

제 2 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활동 및 평가

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직접 시설을 방문하여 신청인들을 상대로 상담을 실시하고 진정을 접수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권리구제 체계의 기반을 다졌다.

(1) 접수 및 처리현황

〈표 2-2-10〉 월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건수(2001. 11. 26 ~ 2002. 12. 31)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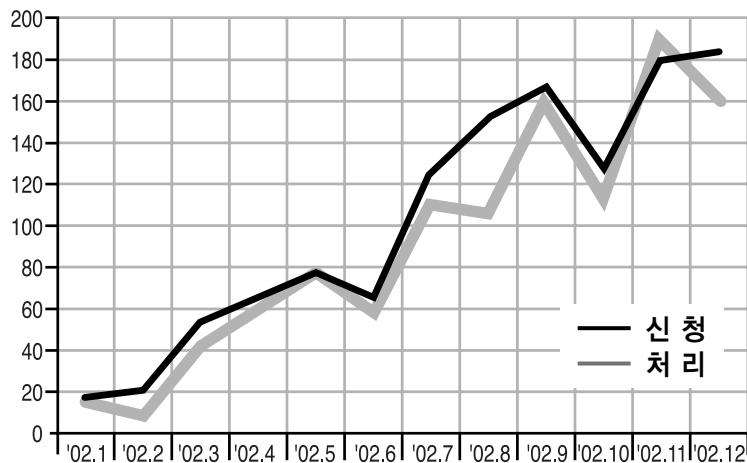
월	2001. 11.	12.	2002. 1.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신청	-	13	17	21	53	67	77	65	124	151	166	127	179	183	1,243
처리*		9	15	9	42	61	76	58	110	105	159	111	189	160	1,104

* 처리 = 진정 + 상담종결 + 철회

위원회가 진정접수를 받기 시작한 데 이어 2001년 12월부터 면전진정 신청이 접수되었고 2002년 4월, 사무처 구성 전후로 신청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2년 7월 부터 증가폭이 급격히 커지기 시작하면서 총 1243건의 면전진정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이중에서 1104건이 처리되었다.

〈그림 2-2-4〉 월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2001. 11. 26 ~ 2002. 12. 31)

(단위 : 건)



〈표 2-2-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면전진정 총 신청건수 1243건 중에서 위원회 직원이 시설을 방문해 진정접수를 한 경우는 556건으로 44.7%, 진정접수를 하지 않고 상담을 실시한 후 종결처리한 것은 307건으로 24.7%, 면전진정 신청을 철회한 경우가 241건으로 19.4%를 차지했다. 또한, 면전진정 신청이 쇄도함에 따라 전직원이 나서서 면전진정을 접수하였으나, 절대적인 인력 부족으로 인해 신청건수의 11.2%에 해당하는 139건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못하였다.

〈표 2-2-11〉 시설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2001. 11. 26 ~ 2002. 12. 31)

(단위 : 건)

수용시설명	신청	철회	진정	상담종결	미처리	비 고
계(%)	1,243 (100.0)	241 (19.4)	556 (44.7)	307 (24.7)	139 (11.2)	
교정시설	1234	241	548	306	138	
안양교도소	77	28	32	14	3	
춘천교도소	19	3	6	10	-	
원주교도소	40	9	16	13	2	
의정부교도소	5	3	2	-	-	
여주교도소	2	2	-	-	-	
영등포교도소	5	2	2	1	-	
서울구치소	77	12	39	17	8	미처리 1건 마산(교)로 이송
성동구치소	7	2	1	4	-	
인천구치소	27	8	9	8	2	
수원구치소	5	1	2	2	-	
강릉교도소	2	2	-	-	-	
청송교도소	55	6	25	8	16	
청송제2교도소	137	9	59	42	27	
청송제1보호감호소	17	3	8	2	4	
청송제2보호감호소	45	5	18	15	7	

제 2 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활동 및 평가

수용시설명	신청	철회	진정	상담종결	미처리	비 고
대구교도소	91	11	47	24	9	
부산교도소	51	3	34	6	8	
진주교도소	74	24	27	17	6	
안동교도소	19	3	12	4	-	
경주교도소	3	2	-	1	-	
마산교도소	11	1	-	6	5	미처리 1건 서울(구)에서 이송
대구구치소	2	1	-	1	-	
울산구치소	1	-	1	-	-	
부산구치소	53	11	20	18	3	진정 1건 공주치료(감)으로 이송
대전교도소	75	21	32	19	4	미처리 1건 광주(교)에서 이송
청주교도소	35	4	20	10	1	
공주교도소	42	15	14	7	6	
천안구치지소	1	-	1	-	-	
논산구치지소	2	-	1	1	-	
천안개방교도소	1	-	1	-	-	
홍성교도소	14	5	5	1	3	
청주여자교도소	1	-	-	-	1	미처리 1건 군산(교)에서 이송
평택구치지소	1	-	-	-	1	
광주교도소	141	27	55	33	15	미처리 1건 대전(교)로 이송
전주교도소	56	13	28	10	5	
목포교도소	28	10	12	4	2	
군산교도소	2	1	-	-	-	미처리 1건 청주여(교)로 이송
장흥교도소	5	2	3	-	-	
순천교도소	4	1	3	-	-	
제주교도소	1	-	1	-	-	
경찰서	5	-	5	-	-	
안성경찰서	1	-	1	-	-	

수용시설명	신청	철회	진정	상담종결	미처리	비 고
분당경찰서	1	-	1	-	-	
성동경찰서	1	-	1	-	-	
서초경찰서	1	-	1	-	-	
전주중부경찰서	1	-	1	-	-	
보호시설	4	-	3	1	1	
공주치료감호소	-	-	1	-	-	1건 부산(구)에서 이송
갱생보호공단(광주)	1	-	1	-	-	
화성외국인보호소	2	-	1	1	-	
국립춘천정신병원	1	-	-	-	1	

면전진정 신청인이 수용된 시설을 보면 광주교도소와 청송제2교도소가 각각 141건, 137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대구교도소, 안양교도소, 서울구치소, 대전교도소, 진주교도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금시설 중에서는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면전진정 신청이 다수를 이루었으며, 경찰서 유치장 등에 있는 수용자들과 보호시설 수용자들의 면전진정 신청은 총 9건에 머물렀는데 이는 교정시설에 비해 기타 구금·보호시설에서의 진정에 대한 홍보 및 인식 부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신청건수가 많은 시설에서 철회건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안양교도소와 광주교도소 수용자들의 철회건수가 각각 28건,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진주교도소와 대전교도소에서도 각각 철회건수가 24건, 21건으로 면전진정 신청건수에 비해 철회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제 2 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활동 및 평가

〈표 2-2-12〉 면전진정 신청 철회 사유(2001. 11. 26 ~ 2002. 12. 31)

(단위 : 건)

철회 사유	건수(%)
계	241 (100.0)
진정사유 해소	79 (32.8)
심경의 변화	42 (17.4)
출소로 인한 자동철회	15 (6.3)
진정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	4 (1.7)
서면진정으로 전환	3 (1.2)
진정으로 인한 불이익 우려	2 (0.8)
소송을 위해	2 (0.8)
조사를 원치 않음	1 (0.4)
출소 후 진정 예정	1 (0.4)
미상	92 (38.2)

면전진정을 신청했다가 철회한 경우 철회서에 나타난 사유를 분석해 보면 ‘진정을 하고자 했던 사유가 해소되었기 때문’이 79건으로 32.8%,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심경의 변화’로 인해 진정을 원치 않는 경우가 42건으로 17.4%를 차지했다. 또한 면전진정 신청 후 위원회 직원들이 해당 시설을 방문하기 전에 출소를 하게 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철회된 경우가 15건(6.3%) 있었으며, ‘진정의 실효성에 의문이 생겨서’, ‘진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염려되어’, ‘서면진정이나 소송을 하기 위해’ 철회한 경우 등이 있었다.

(2) 상담종결 사례분류

면전진정 신청인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을 방문하여 신청인을 면담하였으나,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지 않고 상담종결한 307건에 대해 종결사유를 분석해 보면 〈표 2-2-13〉과 같다.

즉, 진정하고자 하는 사안이 이미 진정한 것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유관한 내

〈표 2-2-13〉 면전진정 신청 사례 중 상담종결 사유(2001. 11. 26~2002. 12. 31)

(단위 : 건)

상담종결 사유		건수(%)
계		307(100.0)
기진정한 내용과 관련된 내용	기진정 내용과 동일한 진정, 관련내용 추가 등	75(24.5)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촉구	신속한 조사, 피진정인 처벌 등 요구	49(16.0)
위원회가 시설에 건의, 시정해 주기를 희망	의료조치, 이송, 전방, 입병 요구 등	45(14.7)
위원회법 제32조 각하사유에 해당	조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3)	29(9.4)
	조사가능 기간 도과 (1)	
	법원이나 현재의 재판, 수사중이거나 종결됨 (19)	
	법원의 확정판결 혹은 현재결정에 반함 (6)	
법령, 제도 개선건의	제도개선 요구 등	15(4.9)
추후 진정을 원함	상황변화를 기다린 후 진정여부 결정	9(2.9)
위원회의 도움을 원함	변호사 섭외, 가족 연락, 자매결연 알선 등	8(2.6)
진정하고자 했던 문제가 해결됨	입병, 독거신청, 외부진료 등 요구사항 해소	8(2.6)
상담만을 원함	하소연, 불안감 해소, 외부인 접견을 원함	7(2.3)
법률상담	소송 절차 문의 등	4(1.3)
진정으로 인한 불이익 우려	표적 검방으로 인한 불이익 우려	1(0.3)
기타	형기만료, 진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동료 수용자의 보복행위 우려 등	57(18.5)

용이므로 해당 사건에 추가하여 처리토록 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24.5%), 신속한 조사촉구(16.0%), 의료조치, 이송, 전방, 입병 등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시설측에 건의하여 시정해 주기를 희망(14.7%)하는 것으로, 현지에서 즉시 해결하거나 설명을 해 줌으로써 신청인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경우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그 외에 상담으로 종결한 것은 위원회가 조사권한을 가질 수 없는 사안이나 추후에 진정을 원하는 경우였다. 또한 법령, 제도개선에 관한 요구에 대해서 개별 진정사건으로 처리하기보다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 경우, 변호사 섭외나 법률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도 상담종결로 처리되었다. 기타

제 2 편

국가인권위원회 주요 활동 및 평가

는 신청인이 형기만료를 앞두고 진정을 포기하거나, 진정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거나, 동료 수용자의 보복행위를 우려하여 진정의사를 철회한 경우 등이다.

제3절 평 가

위원회법이 발효된 후 위원회가 제일 먼저 시작한 업무가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과 진정접수이다. 사무처가 구성되지 않아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위원장과 인권위원들이 직접 나서서 상담과 진정접수를 시작하였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시작한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을 통해 1년에 1만 6000여 건이 넘는 진정, 상담 및 안내 등 민원을 접수·처리하였다.

또한 구금·보호시설에 위원회법시행령에 따른 진정함 설치를 독려·점검하고, 인권위원 및 직원들이 시설을 방문하여 상담과 진정을 접수함으로써 ‘앞아서’ 받기보다는 필요한 곳에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권리구제 체계를 확립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기관 직원 등에게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주고 시설 수용자들에 대해서도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인권의식 고양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전국에 위치한 230여 개소의 경찰서 유치장, 44개 교정시설 등에서 쇄도하는 면전진정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랐으며, 제한된 인력으로 전국에 산재한 구금·보호시설을 방문하여 진정을 접수하는 것에 한계가 노정되었다. 즉, 위원회의 전직원이 조를 편성하여 면전진정 접수업무에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12월말 현재 신청건수의 11.2%인 139건을 처리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전국의 구금·보호시설 수용자들이 신속하게 상담과 진정접수를 할 수 있고,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든 위원회에 접근하여 적절한 권리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 관련 법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지방사무소를 개설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원거리 거주자들을 위한 ‘화상상담 시스템’과 청각장애자들을 위한 ‘인터넷 실시간 상담’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는, 인권상담 서비스를 확충하면서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상담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전문상담원을 위촉하여 활용하였지만 이들은 인권, 상담, 법률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활동가라는 지위로 인해 상담과 진정을 받고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는 데 있어서 책임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정규 직원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따라 직제개편을 통해 상담담당 직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